第218回國會
(臨時會)

敎育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1年2月19日(月)
場 所 敎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간사선임의건
2. 현황보고
   가. 교육인적자원부

審査된案件

1. 간사선임의건 ····· 2
○ 간사(李在禎, 趙富英)인사 ····· 2
2. 현황보고
   가. 교육인적자원부 ····· 2

(14시26분 개의)

○**委員長 李揆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金聲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鄭順泳 입법심의관이 지난 2월1일자로 전문위원으로 승진되어서 보임되었습니다.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2001년도 첫 회의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햇수로 2년만에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의 여러 관계관들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국회에 나오신 韓完相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님께 교육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으며 머지 않아 도래할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업의 중심에는 우리 교육이 자리잡고 있으며 교육개혁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많은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등 인적자원의 최적화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킨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1년간 우리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장관이 다섯 번씩이나 바뀌게 되어 그동안 교육개혁 정책추진에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우려됩니다.

韓完相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는 그동안 관계와 학계를 두루 섭렵하시고 높으신 경륜과 학식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가 더욱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인사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순서로 들어겠습니다.

---

1. 간사선임의건

(14시29분)

○**委員長 李揆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새천년민주당의 薛 勳 위원께서 간사를 맡아서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정상 간사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시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동 교섭단체에서는 李在禎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해오셨고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자유민주연합에서는 趙富英 위원님을 추천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들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해온 李在禎 위원님과 趙富英 위원님을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李在禎 위원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禎委員** 사실 제 개인 형편상 도저히 간사직을 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당 내에서 고사를 하고 다른 대안을 찾으시도록 강력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오늘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3당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서 이 나라 교육발전을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한나라당의 黃祐呂 간사님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富英 위원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富英委員**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을 받아가면서 간사로서의 저의 직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

2. 현황보고

가. 교육인적자원부

(14시33분)

○**委員長 李揆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韓完相입니다.

존경하는 李揆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8회 임시국회를 맞이하여 2001년도 처음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으로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안 등을 의결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임에도 23조5,000억원에 이르는 교육예산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적 시점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종전에는 교육부가 학교교육의 틀 안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하여 왔지만 이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보다 넓어진 학습환경 속에서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배치하고 활용하는 책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지식과 지혜의 창출과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이며 아울러 더 삭막해져 가는 사회현실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과 봉사정신이 더욱 요청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여건 속에서 사람을 길러내고 교육시키되 교육된 인재들을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인재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사회 각 분야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의 기본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공익적 인간,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인간, 온정적인 인간을 기르고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요 교육인적자원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부의 2001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R&D 인력 등 현행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진단하여 인적자원개발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부처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적자원개발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력수급 전략과 인력자원개발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역할분담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기초학력향상과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중학생 187만명 중 약 19.5%에 해당되는 도서·벽지와 읍·면 지역의 중학생 36만명만이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통령님의 교육복지구현과 민생안정을 위한 결단에 의해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한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생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목표로 하여 학생의 개인차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이 자신의 장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현장 정착을 위하여 구성된 제7차 교육과정 시행준비단과 제7차 교육과정지원 장학협의단을 주축으로 적정한 교원확보와 시설확충 및 현장교원에 대한 연수·홍보강화 등을 통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초·중등교원 수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의 경우 98년 이후 명예퇴직자 급증으로 발생한 공급부족 현상은 최근 퇴직교원 감소로 그 심각성이 완화되고 있지만 금년에도 3,000명 정도의 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퇴직교원 등을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고 순회교사제도를 활성화하며 중등교사 자격자를 교과전담 강사로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특히 경기도 등 인구유입지역의 교사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교원정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원활한 교원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의 성공적 정착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예고한 후 수능등급제 도입,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다양한 전형자료와 방법의 개발 및 확대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 발간 및 지역별 설명회 개최 그리고 전형자료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입학전형의 다양화, 특성화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의 활용능력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이 크게 좌우됩니다. 작년 말까지 구축된 학교정보화 인프라 기반을 토대로 학생 및 교원의 정보활용능력을 강화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관련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전국민의 정보화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정보화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제출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는 초·중등교육법, 과학교육진흥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유네스코활동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에 대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모두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현안업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인적자원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相權 차관입니다.

李基雨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金朝寧 학교정책실장입니다.

金京會 평생직업교육국장입니다.

具寬書 대학지원국장입니다.

金坪洙 교육자치지원국장입니다.

李承茂 공보관입니다.

李永燦 감사관입니다.

金正基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입니다.

禹亨植 교원정책심의관입니다.

白鍾冕 총무과장입니다.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현재 공모 중에 있어서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인적자원정책국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鄭奉根 비서실장이 겸직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보고를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장 李基雨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업무, 계류중인 법률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1월29일자로 발족된 교육인적자원부는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을 위해서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장을 신설했습니다. 그 대신 종전의 교육정책기획관,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은 폐지되고 국제교육협력관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나머지 기획관리실, 평생교육국, 고등교육지원국, 교육자치지원국, 공보관, 감사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평생교육국은 기구표에서와 같이 평생직업교육국으로, 고등교육지원국은 대학지원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인원을 말씀드리면 개편되기 전 423명의 인원이 437명으로 14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쪽의 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직제개편된 것 중에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지원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할 과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있습니까? 부서가 있습니까?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국제정보화기획관, 국장급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인 과장, 정보화지원담당관인 과장,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인 과장 등 세 사람의 과장이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내 말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밑에 세 사람의 담당관인 과장만 있지 과장 밑에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과장 밑에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

○**李在五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기구 및 조직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 문제를 담당하는 과가 하나도 없네요. 청소년 교육 문제, 청소년 문화 문제 또 문제학생들의 학교이탈 문제, 가출 문제 또 학교에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총괄하는 청소년 문화정책에 관한 부서는 하나도 없네요. 왜 없지요? 그것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그 업무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새로 생긴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업무보고 밑에 보시면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당분간은, 지금 직제상으로는 인적자원정책국의 조정2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조정2과에서 청소년문제를 담당한다는 말이에요?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정책국의 경우에는 28개 부처와 청에서 하고 있는 225개의 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정책총괄과에서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

고 조정1과에서는 경제부처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조정2과에서는 비경제부처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문화관광부, 국무총리실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사실상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는 전국 18개 부처, 청에서 나누어서 각각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문화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설치되면서 우리 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조직을 늘리지 않는 원칙에 따라서 일단 현재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업무와 기능은 그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총괄·조정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金德圭委員** 방금 李在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할 수도 있겠고 물론 답변도 그렇게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학교체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의 체육인적자원을 육성해 내는데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체육의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조정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해서, 물론 관련부서에서 이 체육교육문제를 관장하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체육지도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구개편을 하면서 조금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시고 그 자원을 육성할 것인지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金德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학교체육문제에 대해서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학교정책실 안의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관광부에 체육을 담당하는 차관보가 있고 또 체육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체육업무를 일단 전담하고 있고 다만 학교 내의 체육과 관련해서는 학교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德圭委員** 학교정책실에서는 몇 사람 정도의 전문가가 포진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별도로 체육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이 체육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德圭委員** 이 부분이 기초체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인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예, 앞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에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李在禎委員** 지난번 국정감사 때 분명히 학교체육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고 그것이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안 된 셈이지요?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예, 그렇습니다.

○**敎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金朝寧**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체육관계 때문에 학교정책실의 학교정책과에 체육을 전공한 체육담당연구사를 특별배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에 따라서 학교체육은 학교정책과에서, 보건관계는 교육자치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체육의 안전지도문제는 학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李在禎委員** 아니지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한 것은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88올림픽대회 이후 어떻게 보면 선수 중심의 학교체육 내지는 일반체육계가 굴러하고 있음으로 해서 정말 일반국민들의 체력 향상이나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적어도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체육이 본격적으로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독립된 부서가 적어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

다.

4쪽의 공무원 정원입니다.

교육부 본부 437명을 비롯해서 35만8,039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급학교 현황입니다.

유치원 8,494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모두 1만9,031개교, 학생수는 1,168만6,141명, 교원은 42만7,342명이 되겠습니다.

5쪽의 2001년 교육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출예산을 보시면 작년도는 19조 7,686억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23조5,233억원으로 늘어나서 정부예산 증가는 6.0%였습니다만 교육예산은 무려 19.0%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15대국회 교육위원이셨던 金貞淑 위원님, 李在五 위원님, 黃祐呂 위원님, 薛 勳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러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GDP 대비로 살펴보면 98년 당초 예산에서는 GDP 5% 정도 되었습니다만 99년에는 4.20%까지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4.52%가 되어 있습니다만 5%를 확보하려고 하면 아직까지 2조7,00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에 대하여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지식과 기술, 자본과 정보가 모두 국경을 초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지식집약화가 가속화될 전망으로 경쟁력의 핵심은 국민 개개인에게 내재된 소질, 적성, 능력의 개발과 이의 활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범정부적인 총괄·조정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여 인적자원개발업무가 정부부처에 산재되어 중복 및 낭비가 발생하고 개별부처에서 추진이 곤란한 정책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개별부처 차원을 넘어서 국익차원에서 인적자원정책을 추진할 국가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정부 각 부처 및 사회각 분야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공익적 인간, 창발적 인간, 온정적 인간을 기르고 활용하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1월3일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교육부총리제도 도입을 말씀하신 후에 거의 1년만인 12월27일에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1월29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최대한 활용하고 정책의 공동추진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실질적 정책조율과 정책시행에 있어 부처간 팀워크 강화를 위해서 관계부처 실·국장급의 실무조정회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입니다.

둘째, 부처간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부처 즉 28개 부처·청, 225개의 기능으로 흩어져 추진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국가차원에서 총괄·조정하여 정책상호간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정책개발·권고기능과 정부 각 부처의 정책수립·시행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겠으며,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기획·조정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은 지금 저희 정부안의 법률 속에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용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기본법으로서 인적자원개발촉진법을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공동 참여아래 중장기 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을 2001년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인적자원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299개에 달하는 교육인적자원 관련 법령을 2005년까지 규제·간섭위주에서 지원·조성 중심으로 대폭 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01년 상반기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시, 광역시, 특별시를 포함한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 의무교육을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2002년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 및 제 수당은 국가에서 봉급교부금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 의무교육 확대 실시기간 동안은 학부모가 부담해 오던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금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확보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학부모 부담의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이 표에서와 같이 7,993억원은…… 매년 세수가 6조 내지 7조가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 최우선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증액교부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행정자치부 소관 사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봉급전입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2,519억원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는 계속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중등교원 봉급 100%, 부산은 50% 나머지 광역시와 경기도는 중등교원 봉급의 1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지원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그동안 나머지 차액을 지원해 오던 것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3,880억원은 조금 전에 예산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보다 올해 늘어난 3조7,547억원 중에서 이것을 충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1년 상반기 중에 부처가 협의를 거쳐서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하여서 내년 3월1일부터는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그동안 7차 교육과정시행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왔고 또 7차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후속 지원연구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원 수급, 양성, 연수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2004년까지 매년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하고 계약제 교원충원을 통한 교원 운용의 탄력성을 도모하며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대학 편입학, 정원의 확대 및 복수전공 자격취득 동기를 부여하고 부전공 자격연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적정 교육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매년 6,000억원을 지원하여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필요한 시설 개선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연수·홍보를 강화하고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후속지원 연구의 지속적 추진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 편찬 등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원 수급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무척 걱정하시는 사항입니다. 교원정원 증원을 어떻게 하면 원활히 확보할 수 있고 또 부족되는 초등교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립 초·중등교원 증원입니다.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따른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5,500명의 교원증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교원정원을 5,500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1,945명만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틀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369명을 추가 확보해 주는 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 1,945명을 합하여 2,314명이 확보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314명만 증원이 된다면 기존 학교의 교원정원을 조정하지 않고는 신설학교에 교원을 배치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기존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여건의 악화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수행평가나 특성별 수업,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등에 따라 교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서 정부의 공교육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교원노조 및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와의 단체교섭 시에도 정원 확보 부족 문제를 현안과제로 부각시켜 우리부 및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계속해서 행정자치부에 추가 증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우선 시·도별로 교원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교원증원 요인이 발생

한 시·도에 배정을 하고 계약제교원의 정원 산정 방식을 계약제교원의 담당시간수에 따라 정원 1명으로 2명 내지 3명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 중에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근본적인 교원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원……

○**薛　勳委員**　지금 행자부에서 정원을 이렇게 안 해주는 논거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모든 공무원의 정원을 줄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2월 말까지 완수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정원도 이러한 맥락에서 증원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薛　勳委員**　논리적으로 그것을 격파 못해요?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에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여명을 그래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별도로 이번 정원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정원을 포함한 교원과 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薛　勳委員**　행정자치부가 고민하고 증원 안 하려는 이유도 다 있겠지만 문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지금 처해 있는 우리 경제적 사정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내려면 흔히 말하는 교육입국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 틀을 맞추는 일이 교원증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특히 기획예산처를 비롯하여 행자부장관 이하 전 각료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끼리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신임 장관께서도 오셨고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무원 사회 내에서 행정자치부 또 기획예산처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교육입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공염불입니다. 우리끼리 백날 해 봐야 소용 없습니다. 관료들이 생각을 바꾸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사활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金德圭委員**　질의 때도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薛　勳 위원이 한 말씀 드렸으니까 저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인력을 양성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고 그 자원을 적정한 곳에 배치하는데 그 자원배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인적자원부가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학교에 배치를 못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만큼 제동이 걸리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배정받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실장!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해가지고 현재 경기도 여야 의원들이 행자부 장관도 만날 계획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이것을 법과 제도나 령가지고 고칠 수 없어요? 언제까지 행자부에 가서 사정을 해야 합니까?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그 문제는 정원확보에 관련해서……

○**委員長　李揆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정원령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해 오던 것이 뭐냐 하면 교원을 국가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정원 속에 같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지방공무원은 또 왜 안 돼요? 교사 말고 학교 서무과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경기도 같은 데는 600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이에요.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원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라든지 신설학교 등이 새로 생김에 따라 증원을 합니다마는 오히려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숫자를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이따가 다시 이야기해요.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 양성 대 임용비율이 1 대 1로 안정 지속되어 오던 초등교원 수급체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퇴직교원 급증으로 공급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시면 다행히 99년을 정점으로 퇴직교원수가 점차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98년에 4,871명, 99년에는 무려 1만5,890명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10분의 1 수준인 1,729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초등교원 수급대책도 당분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조금 지나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래 쪽에 2001학년도 1학기 수급상황을 보고드리면 퇴직 등에 따르는 증원 필요인원이 1만1,778명이나 신규임용 등 정규교사로 충원가능 인원이 8,758명으로 부족되는 3,020명은 부득이 기간제교사로 충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수급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인구유입 급증으로 학교신설, 학급증설이 많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신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충원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도서·벽지가 많은 도지역은 임용기피현상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규교사로 충원이 어려운 경우 기간제 교사를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부족인원 3,020명은 퇴직교원 등 기간제 교사 및 순회교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교원 정년조정을 할 때 62세 이후 65세까지의 교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나 또 필요한 경우에 30% 정도는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공무원연금법 개정방안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또 65세까지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에 2001년보다 10배 가까운 교원들이 퇴직함으로 해서 이러한 수급문제가 더 악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국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발언을 하셨는데 정년을 자를 때 62세 이후 63세에서 65세까지 되신 분들 중에서 훌륭한 교육을 담당할 만한 자질이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 30% 정도는 더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연금법이 바뀐다는 소문이 나고 어떻게 해서 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 듣겠는데요?

지금 관리들이 무책임하게 밀어부쳐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앞에서 수급실태에 98년도에는 몇 명이고 99년도에는 몇 명으로 점점 내려간다고 낙관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수급에 차질이 나서 기간제 교사로 중등교사들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 대거 데려다가 초등교육을 맡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간동안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대로 된 초등교육을 못 받고 저급한 교육을 받는다고 상상할 때 몇 십년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인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데 무책임하게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고 또 방금 보고에도 연금법이 바뀐다는 소문이 나서 많이 나갔다고 했는데 법을 만들었으니까 교사들이 나간 것이지요.

그리고 명퇴하라고 전부 유도했지 않습니까? 유도해 놓고 자꾸 연금법이 바뀌어진다는 소문 때문에 많이 나가서 그랬다 또 예상밖으로 명퇴를 많이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핑계를 교사들에게 던지지 마시라고요. 여기에서 책임진 공무원 하나도 없어요. 정년 62세로 할 때 얼마나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겠느냐 또 교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어서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63세까지로 하고 점진적으로 해서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여서 의견을 냈지만 무 자르듯이 잘랐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은 실패입니다. 100% 실패라는 것은 누구나 다 시인하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다른 데로 좌천되거나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누구보고 책임지라고 하느냐, 아이들이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질 떨어진 교육받고 있는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교육을 받습니까? 또 이것이 앞으로 금방 나타나지도 않아요. 20년 후 성인 된 후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무서운 짓을 해놓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사들이 법이 바뀌려고 하니까 명퇴를 많이 해서 차질이 났고 또 행자부에 증원을 요청했는데 안 해준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육부는 교육부 책임만 벗으려고 하지 마시고 金大中 국민의 정부인데 정부에서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시스템을 가동시켜서라도 교육에 비상을 걸어야지요.

다시 한 번 아까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 보세요.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한 번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제대로 드린 일이 없습니다.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중간에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진실대로 밝힌다는 의미에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정년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2년 동안에 정년퇴직은 1만2,382명입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은 2만8,957명입니다. 99년, 2000년에 교단을 떠난 선생님들의 숫자가 모두 4만1,339명인데 정년조정으로 인해서 1만2,382명이 떠난 반면에 명예퇴직을 한 선생님은 2만8,957명이나 된다는 이유 자체가 98년 정기국회에서 99년도의 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9,000억원을 예산으로 마련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한 숫자하고 그 다음해 3월초에 조사한 숫자가 하나도 변화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KDI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관련된 개정안의 연구결과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닌데도 그것이 언론상에 대서특필되고 난 다음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자가 한 두 배로 늘어나 가지고 그 해에 제가 농협중앙회 회장님에게 전화를 두 번이나 해서……

○**金貞淑委員** 잠깐만요, 말씀을 길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명예퇴직자 숫자도 정부가 조절해 주어야지요. 어쨌든 지금 희망자가 두 배로 늘었다는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희망자가 있더라도 교육은 제대로 가게 해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왜 이렇게 교육을 엉망으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교육부가 책임져야지요. 희망했다고 하더라도 다 조절해서 명퇴를 시켜야지요. 물론 명퇴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그 해에 많았어요. 나이 오십 살만 넘어가면 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무능하고 몰염치한 교사로 몰아붙이는 그런 교단의 풍토였습니다. 그 분위기까지 책임지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내 말은 일단 두 배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왜 다 해주느냐 그겁니다. 교육에 차질이 없는 방향에서 해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책임지는 사람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교사수급을 잘못해서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지금 보고에도 무사안일하게 앞으로 잘 된다고만 하는 거예요. 나갈 사람은 다 나갔는데 줄어들 것은 당연하지요. 아까 薛 勳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행자부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무슨 행자부 핑계를 댑니까? 대통령이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법을 바꾸어서라도 좌우간 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어린 애들을 말 못하고 투표권 없다고 이렇게 내몰아쳐도 됩니까? 다시 답변해 주세요.

○**薛 勳委員** 그것도 그렇고 도서·벽지 임용기피현상에 대해서 무슨 장치를 해서 이런 현상이 사라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가산점이 있어서 서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안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도 했어요. 그러면 가산점을 다시 부활시켜서 가산점이 많으니까 적게 해서라도 이 기피현상이 사라지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이미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서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薛 勳委員**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됩니까?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사자격자를 교과전담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2001학년도부터 교육대학 학사편입학 증원을 신입생의 5%에서 20%로 확대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양성 대 임용비율을 종전의 1 대 1에서 1.2 대 1로 유지하여 초등교원 공급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17쪽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 2월 말까지 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2002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자료집을 발간토록 하고 3월 중으로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여금 출제방향, 출제범위, 추진일정, 시험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들어있는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부, 대학, 시·도교육청, 고등학교가 연계하여 권역별로 주요 대학 및 거점대학 중심으

로 입시설명회를 실시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한 진학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정보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제1단계 교육정보화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추진하여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33만 전 교원에 대한 1인 1PC 보급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제2단계 교육정보화발전방안을 수립하여 기 구축된 학교정보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원·학생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학술연구정보의 디지털화 및 공유 활성화 등 21세기 지식사회형 교육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단계 교육정보화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하고 학생, 교원 등 전 교육가족의 정보활용능력을 강화하고 교육용 컨텐츠 개발 보급 및 에듀넷을 통한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 사업내용을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모두 11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입법안으로 7건의 법률안이, 정부입법안으로 4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입법은 소위에서 의결된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비롯해서 7건이고 정부입법은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으로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원활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각 위원님께 15분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15분을 유념해 주시고 일괄질의 하시는 위원님은 질의를 마친 다음에 일괄답변을 들으시고 일문일답을 하실 분은 15분 내에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薛 勳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 勳委員** 가능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는 대학총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 또 현정부에서 통일부총리로 활동하셨던 경력이 계시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교육 현장에서 지지부진하다고 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신임 부총리께서 제대로 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맡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맡으셨기 때문에 훌륭한 구상으로 우리 교육을 지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를 맡은 수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면 우리 교육을 좀더 정상화시키고 21세기에 맞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5년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장관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교육개혁을 외쳐왔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부시 정부도 정책의 제1목표로 교육개혁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개혁을 통해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내고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은 어차피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전 국민이 해야 되겠지만 교육개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누가 교육개혁을 할 것이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이 할 것이냐, 교사가 할 것이냐, 학생들이 할 것이냐……

결국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교사들입니다. 이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로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교육개혁을 성공시키느냐 못 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5년간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지금까지 해온 교육개혁은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과연 교사가 우리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었던가 하는 회의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육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나선다면 다른 것을 떠나서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로 모셔놓고 그분들이 교육개혁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되고 안 되고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계속해서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처럼 또는 대상처럼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교육개혁을 외쳐보아야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다놓고 교육개혁을 하자고 해봐도 그것을 할 사람이, 교사가 교육개혁에 대해서 따라오지 못하고 앞장서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데 얼마나 굳은 각오로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로 내세울 것인가, 여기에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어떤 장치를 해서 교사가 교육개혁의 선두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되고 난 뒤에 교육개혁의 내용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의 학생을 어떻게 하고 학교내용을 어떻게 하고 하는 컨텐츠가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 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총리께서는 교육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로 재정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5년 동안, 전 정부부터 교육개혁을 주장해 왔으니까 5년도 더 됩니다. 수년 동안 해온 이 교육개혁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2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한 교육개혁은 어떻게 되었는가 또 전 정부부터 이어져온 교육개혁 현황은 어떤가 하는 평가와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평가와 점검이 있는 선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평가와 점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쯤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평가와 점검을 정확히 해서 다음으로 나가야 할 상황을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학교현장이 제대로 된 구조 속에서 굴러가야 합니다. 교육개혁이 학교현장에서 뿌리 내리도록 하려면 어떤 틀을 갖출 것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이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교육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다른 것 소용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은 밝고 바르게 되어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학교현장이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지금 공립학교는 대체로 되어가고 있는데 사립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물론 많은 사립들이 좋은 학교로 거듭나고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적지 않은 사립학교에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이 민주적이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투명한 상황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육개혁을 외쳐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의 바른 틀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개혁이 완수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다시 한번 본 위원의 제언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분규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마다 분규사학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국정감사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분규사학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우리가 하면 무엇하나' 하는 자탄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받았던 이사회가 스스로 정상화할 의지가 없으면 교육부나 교육청이 나서서 해내야

합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국정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 국회나 국회의 국정감사를 비웃는 것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규사학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신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법인 측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이사장이 아직도 전횡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측근들을 이사로 만들고 이사장도 공석으로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국정감사한 내용을 아직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교육부가 왜 수수방관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정감사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분규사학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在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먼저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교수와 대학총장을 역임하시고 또 통일부총리도 맡으셨던, 전문성과 덕망이 높으신 韓完相 교육부총리가 새로 오신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 국장님들이 거의 자리를 이동하였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함께 봅시다.

주요 업무보고를 봅시다. 국장, 과장님들도 같이 보십시오.

지금 교육부가 총괄하는 학생수를 보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약 1,200만에 가깝습니다. 교원수만 해도 42만7,000여명입니다. 대학원생 빼놓고 학생수가 1,200만명에 가깝다고 하면 우리나라 4,500만 인구 중 약 4분의 1을 교육부가 직·간접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19조7,000억입니다. 물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예산을 볼 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부 수장이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 되겠습니까? 1,200만 학생을 관장하는 교육부 수장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다가 시간 다 보내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임명권자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마침 이번에 훌륭한 분이 오셨으니까 교육부의 전직원들이 잘 보필하고 또 정말로 변화된 발상을 가지고, 이제 이 정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은 임기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또 새로운 장관에게 업무보고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총리께서 처음 오셔서 하는 일종의 상견례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인 교육재정확보문제, 교원정책문제, 교실붕괴현상 및 청소년문제, 대학입시문제, 영재교육문제, 학생 왕따문제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고 여기에 따른 정책참고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부총리께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지금 학습중입니다.

○**李在五委員** 무상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당과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이 몇 달전 중학교 의무교육화를 하자고 법안을 냈는데 당시 정부여당은 펄쩍 뛰면서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정부에서 내년부터 중학교를 전부 의무교육화 한다고 하는데 우리야 바라는 바이지만 예산이 내년에 2,000억 그 다음 해 5,000억 그 다음 해 7,0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예산의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납니다. 2004년도까지 7,993억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우려이기를 바랍니다마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 대선을 위해서 선심성으로 공약만 발표해 놓고 짐은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런 정치적인 판단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李在五委員** 다음은 성과상여금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사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물론 학년의 담임이라든지 교과에 따라서 다소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교사의 근무성적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생산물 만드는데 따라서 돈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생산업체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성과상여금문제는 차라리 그 돈을 갖고 교원들이 변화되는 시대흐름에 맞는 연수를 통해서 시대적 흐름을 호

흡하고 세계적 변화를 그때그때 낙오됨이 없이 연수할 수 있는 연수비라든지 교원 전체의 복지비로 쓰는 것이 낫지, 개개인별로 상여금을 주어서 오히려 교원을 편가르기하고 교사들 상호간에 갈등만 부추기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정부 차원에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추진한 후에 지금 李在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방법이나 부작용 같은 것은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 혹은 그 유사한 것을 만들어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히 참고하겠습니다.

○**李在五委員** 또 현실적으로 전교조, 한교조, 교총 이 3개 단체가 전부 반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대화해서 교육현장에 부작용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최대한 노력하겠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낀다는 대화를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李在五委員** 다음에 교육부가 그때그때 너무 졸속적으로 무엇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영어시간에는 영어로만 수업하겠다고 했는데, 언론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영어시간에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요. 외국어라고 하는 것이 일본어시간에는 일본어로 수업해야 되고 중국어시간에는 중국어로 수업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장 시행하려면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연수가 필요한데 그러한 연수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영어라고 하는 것이 국제어가 되어서 중국어나 기타 다른 언어와는 다르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세계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수업만은 영어로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나 다른 언어와는 구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李在五委員**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교사들의 연수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세워져 있지 않고, 오늘 신문에 난 것은 오보라고 합니다.

○**李在五委員** 오보입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예.

○**李在五委員**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1,200만에 가까운 학생들이 교육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부총리께서 오셨으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시급한 것이 사교육비문제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대다수 국민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예도 많이 있고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시제도에서 기인한 것인데 대학입시제도는 정부가 이것저것 조금씩 손을 대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교육부는 국가인력관리 차원에서 정원조정이라든지 학사관리만 하고 대학입시는 완전히 대학으로 넘기는, 적어도 학생들이 공교육을 우습게 여기고 학교보다 학원 가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풍조는 고액과외를 단속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자식들 학원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 하나라도 부총리께서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분규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데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권만으로도 사학비리를 어느 정도 근절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부가 갖고 있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서라도 사학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부총리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德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圭委員** 金德圭 위원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커다란 기대 속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개혁을 통해서 지식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일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여기에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개혁과제 또한 교원과 함께 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되는 개혁을 모든 교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거의 빼놓지 않고 졸업식 현장을 둘러보는 가운데 많은 교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방금 李在五 위원께서 제기하신 성과급제에 관한 교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사실상 정부는 1999년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그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발표했고 각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부도 지난 1999년3월에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에서 교원보수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성과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원의 업무량을 반영하는 수당지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99년3월부터 복수 담임교사 전원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99년 말부터 교직특성에 맞는 성과상여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을 일부 인상한 바 있고 드디어 올해는 기본급 봉급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교원보수체계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제를 교직에 적용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최근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일선 초·중등교원의 86%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은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성과급제 도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는 우선 평가가 참으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성과급제는 민간기업에서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투입과 산출이 명확한 민간기업조직에 부합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직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 자체가 난해하고 한 아동이 성장하는데 20년 가까운 장시간이 필요하듯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는 교육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 이를 평가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행계획에서 교장, 교감 등 관리직과 교육전문직에 대한 성과 평가는 교육정책 추진실적, 업무 추진 성과, 특색사업 추진실적 등을 요소로 해서 평가하고 교사에 대한 평가는 주당 수업시간수, 담임교사·보직교사 업무담당 여부 등 객관적인 업무량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의 경우는 학교에 대한 평가이고 교사의 경우는 과목별·영역별 팀으로 교육활동을 벌이는 교육현장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기준들이 객관적 지표 몇 개에 한정된 것은 그만큼 평가의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차등 성과급이 교원들간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학교 현장, 교실 현장에서 나타나는 큰 문제점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교원들은 학부모들로부터 수업의 질을 제고할 것에 대한 유언·무언의 압력을 받는 것으로도 직무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과의 보이지 않는 경쟁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라고 하니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물을 다수가 먼저 도달하기 위해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목표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먼저 도달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이란 말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들간의 협력체제를 붕괴시키고 묵묵히 일해오던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보고를 받아 왔습니다마는 그대로 한다고 하면 차등 성과급의 수혜자의 폭이 너무 넓다는 것도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위 10% 이내의 교원은 150%를 지급하고, 상위 10% 내지 30% 이내의 교원은 100%를 지급하고, 30% 내지 70% 이내의 교원은 50%를 지급하며 하위 30%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대체 성과급이 근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賞의 의미가 강하다면 그 성과급은 전체 중 소수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의 모두에게 성과급을 주고 30%만 주지 않는다면 그 30%는 도대체 직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능한 소수'처럼 취급되어 교내에서 따돌림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새 학생들도 왕따 문제로 해서 엄청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교사들까지도 이 성과급을 못 받는 30%에 대해 아무리 비밀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문이 납니다. 아이들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현장에 나타난 그 상황을 한번 상

상해 보면 아마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러한 성과급 보수체계가 교사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며 나아가 교육의 질적 우월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교사의 업적과 능력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 평가체계와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성과급 제도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우려하면서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성과급보다는 우선 직무급을 조정하여 업무부담과 능력이 반영되는 차등보수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담임수당이나 초과수업수당 등 직무급여의 액수를 현실화하여 보수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굳이 성과급제도를 실시하려고 한다면 실시 전에 교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은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 어떤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과급 제도의 시행에는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필요한데 이미 제시된 기준 이상의, 보다 설득력 있는 기준들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가기준을 보다 다양하고 상세하게 규정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고 평가기준의 제도화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국내외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국가발전에 연결되도록 만드는 총체적 책임을 지도록 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정보통신(IT)분야의 고급인력들이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어떤 자료를 갖고 있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의 IT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유로는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사회분위기, 자녀교육문제, 높은 급여 등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력 3년차 엔지니어는 최소 7만 5,000달러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소 9,500만원 수준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안녕을 위하여 직장을 찾아 떠도는 것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로 인해서 IT 기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동기방식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이나 인터넷 정보 가전기술 개발, 광전송 및 링크 개발 등 파급효과가 큰 국책 프로젝트의 진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보고는 받은 일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출되는 인력을 저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보수수준을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진인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혹은 제3세계 인력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초과학과 수학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알려진 북한의 IT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시적으로 모색해봐야 될 시점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曺正茂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正茂委員** 韓完相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본 위원은 평소 저명한 학자이자 훌륭한 교육가로서 또 진보적 가치관을 가진 사회운동가로서 韓 부총리를 존경해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현장은 그야말로 만신창이입니다. 현장교육은 붕괴될 대로 붕괴됐고 교육이 실종된 자리에는 교사들의 한숨과 학생들의 방종·일탈 그리고 교육행정당국의 무원칙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韓 부총리의 일관된 개혁성이 교단현장에 깊숙이 스며들어 갈등과 한숨 그리고 혼란이 만연한 우리 교육계의 시름을 덜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까 薛 勳 위원께서 교육개혁적인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정안이 아직은 발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매우 뜨겁습니다.

현재 법 개정의 찬반을 가르는 주제어는 사학의 패러다임 즉,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가운데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학법인측은 사학은 사유재산이므로 사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 개정을 찬성하는 전교조,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사학의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의 초점은 첫째, 사학의 공공성 제고 둘째, 교육의 질 중심으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벌이나 웬만큼 큰 기업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추세이며 이를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익적인 교육사업이니 만큼 회계전문가를 두고, 비리 관련자를 복직하지 못하게 하고, 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주자는 것이 어떻게 사유재산권 침해입니까?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등록금을 이용하여 학교확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땅장사를 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유용하고, 교수나 교사채용, 학생선발에 비리를 저지르는 등 범법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사립학교 재단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미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사안인 만큼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 교육의 96% 그리고 대학교육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비리와 전횡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면에 와 있습니다.

공금유용, 실습비 횡령, 공사비 횡령, 교직원 채용비리, 족벌경영, 교수임용 및 재임비리, 입시와 편입학에서의 부정 등 사학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하며 교육의 질은 나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학들은 학교를 사유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중·고등학교 운영비의 98%가 국고지원과 학생납입금이며 사립대학 경우에는 재단 전입금이 6%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체제 원리 어디에도 국민의 혈세를 사유화해도 좋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학이 공익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면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 시발점이 사립학교법 개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이사회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지원된 국고가 그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감독하게 하고 학교장에게는 교직원의 임·면권을 주어 채용비리를 방지하고 학교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설립과 운영이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체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교육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李在五 위원과 金德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부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상여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2월 말 최초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총 소요예산은 2,000억원, 교원 1인당 평균 환산시 월봉급액의 55%를 지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때 주당 수업시간수, 담임교사 또는 보직교사업무, 담당여부 등 객관적인 업무량에 따라 평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활동이라는 것이 교사 개개인의 활동에 따라 개인별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성과상여금제를 시행하라고 하니까 고육지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학교현장에서는 교원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사다리 타기, 똑같이 나누기 등 웃지 못할 일들이 예견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들입니다.

부총리!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간의 경쟁을 촉발하는 것보다 교직사회의 자율성과

공동체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성과상여금제도를 시행하시겠다면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성과 평가기준 등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 연후에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성과상여금 재원을 각종 수당으로 전환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교직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부채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의 잦은 교체로 교육정책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로 교육계 수장이 교체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직기관이 고작 6개월에 불과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어느 분야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시책을 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수장의 잦은 교체는 교육 일선에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의 라일리 전 교육장관의 경우 클린턴 정부 8년 임기 동안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교육이 표류하면 나라의 장래가 어지럽습니다. 韓 부총리는 이 점을 유념하여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운영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작은 정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 것은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담당부처의 서열이나 장관의 위상을 높이는 조치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총리께서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행정만을 담당해온 주무부처가 인적자원개발 전반에 걸친 기능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지원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로서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업무조정이 필요한데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 않아 과연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부총리의 진보적인 통일관을 문제삼아 교육인적자원부의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타 중요사항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 정부 부처의 차관 등으로 구성된 25인의 통일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 맞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실시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이념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배분 우선순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무상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할 때 연간 1조 4,000억을 상회하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재정여건, 특히 교육재정이 다른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을 유지하면서 그만한 규모의 추가부담을 해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혹시 조삼모사식으로 여타 교육부문 예산을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충분치 못한 공교육 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로 중학생 1인당 연간 5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학부모들의 진짜 부담은 한 달에 수십, 수백만원씩 하는 학원비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교육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최소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서만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 학기에 개교하는 신설학급과 기존학교 증설학급이 8,700개가 넘어 산술적으로도 최소한 그만한 교사 증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요청한 것은 5,500명 증원이었고 그나마 행정자치부 및 예산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1,945명 증원으로 깎였다고 하니 이 정부가 진심으로……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삼 백 몇 명이 더 추가됐다고 했지요?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369명입니다.

○**曺正茂委員** 교육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령교사 1명을 퇴직시키면 2.7명의 젊은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교원정년단축의 서슬 퍼런 논리는 다 어디 갔습니까? 이래서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범국민적 갈증을 풀어주기는 커녕 갈증을 심화시키지나 않을지 우려됩니다. 교사 증원계획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의무교육 대상자는 퇴학을 시킬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와 같이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초등학교와 읍·면지역의 중학교에서는 퇴학처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답변의 진위여부에 대하여는 추후 조사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市지역의 한 해 평균 중학교 퇴학자 수는 1,0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대로 하면 내년부터 의무교육 대상이 되는 중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제 학생들이 계속 학교에 남아 분위기를 해치고 동료 학생을 때리거나 돈을 빼앗는 탈선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제학생들을 선도하거나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한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물론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관련한 질의, 대학 특례입학 부정과 관련한 질의, 대덕고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富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富英委員** 趙富英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하겠다는 것보다 장관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크게는 하나인데, 한 서너 가지 촉구해 볼까 합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자세히 보고하는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년퇴직문제입니다.

정년퇴직을 99년과 2000년에 합해서 1만2,000명이 했고 그때 명예퇴직 2만8,000여명을 합하면 4만여명의 교원들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여기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대개 기관을 책임졌던 분들이 많은데 조그마한 기관이 됐든 큰 기관이 됐든 구조조정을 할 때는 앞으로의 수요를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때 명예퇴직이 퇴직금이 불안하다고 이심전심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분명히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했습니다. 정년을 낮추는 문제와 명예퇴직문제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기획을 입안하고 행정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작정 집행하다 보니까 교원은 교원대로 부족현상이 나서 실효도 없는 기간제교사로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집행되는 전체 예산은 도리없이 일정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했던 것을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을 잘못 입안했고 시행 상에도 문제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연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것이 정부가 불신 받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부총리께서도 바로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관련된 두 번째는 명예퇴직이 많이 늘어나니까 금년만 해도 지방교육청이 교육재정특별교부금에서 이천삼백 몇 억을 기채해서 명예퇴직금을 줬는데 매년 그것을 다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국회라는 것이 왜 생겼는가, 국회연원을 따지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정부에서 세금을 함부로 걷어서 막 쓰던 것을 법에 의하지 않고는 세금을 못 걷게 하려는 제도 때문에 국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집행도 꼭 필요한 재정을 집행해야 되는데 내가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선생님들 명예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나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것을 광의로 어디에 붙여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정법을 억지로 붙여서, 꼭 필요한 데 쓰라고 법으로 정한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명예퇴직금이나 주는 것으로 한다면 국회는 왜 필요합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제도 자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없도록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부터 투쟁해서라도 그런 재정은 별도예산으로 꼭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서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총리께서 명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자민련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교육계 초미의 관심사인데, 실제 이해당사자들은 전부 연장하자는 것이고 국민일반들은 줄이는 것도 좋은데 지금 새삼스럽게 연장하느냐 하는 여론도 많이

있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는 자료를 계속 내놓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초등학교 교사만 해도 금년에 천몇백 명이 부족하다면서 이달 말이면 얼마가 또 나가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연장을 1년 정도 해놓으면 앞으로 길게는 5년 아니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동안 기간제교사 등 실효 없는 제도가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완전히 개정해서 63세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 3년쯤 63세로 부칙에 한시조항을 넣어서라도 조정해 줘야 현실적으로 부족한 교사문제를 합리적으로 끌고 갈 수 있고 국민에게서 많은 비난이 있는 것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할 얘기입니다마는 그래도 담당부처인 교육부에서는 깊이 생각해 달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哲賢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哲賢委員** 한나라당의 權哲賢 위원입니다.

韓完相 부총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부총리로 임명되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리에 딱 떠오른 것이 '이분은 잘하면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분이고 잘못하면 최저로 잘못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충 대충하다가 말 사람은 아닌데……' 싶어서 축하도 하면서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제 말 뜻을 장관님 아시겠지요?

정말 잘하셔서 韓完相 시대의 흔적과 냄새를 분명히 남기고 그때 한국교육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총리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취임식을 언제 하셨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1월29일에 했습니다.

○**權哲賢委員** 교육부 내에서 취임식 한 것이 몇 시입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3시 반에서 4시에 했습니다.

○**權哲賢委員**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일문일답으로 잠시만 하겠습니다.

오후 3시 반이나 4시라는 시간은 장관이나 총리 또는 시장이나 군수 누구든 취임식을 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교육부의 업무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식 하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아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개혁인지 진보인지…… 무엇이 개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하실 때도 그저 현재에 있는 것을 바꾸어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에도 미세한 신경을 쓰시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한 5년 생활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퍼져서 취임식 같은 것을 아침 8시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8시에 취임식을 하고 한 40분쯤 되면 오신 중요한 분들과 커피 마시고 9시부터 정상적인 업무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오히려 "왜 이렇게 일찍 하십니까?"하고 물어보면 "9시는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시민들을 기다리게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하는 답변을 가끔 하거든요.

오늘 첫 대면이고 상견례이기 때문에 워낙 명석하셔서 교육부 업무를 다 파악하셨으리라 믿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미세한 것은 묻지 않고 일반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韓完相 부총리를 옛날부터 대구 분으로 쭉 알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나와서 TK에서 가장 훌륭한 분 중의 한 분으로 생각해 왔는데 최근에 韓完相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약력을 교육인적자원부 공식 프로필된 것을 받아봤더니 출생지가 충남 당진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맞습니다.

○**權哲賢委員** 그런데 과거의 이력서들에는 대구 또는 경북 금릉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출생지는 당진이 맞습니다.

○**權哲賢委員** 그런데 왜 옛날 이력서에는 전부 대구 또는 경북 금릉으로……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워낙 내 성장지가 대구고……

○**權哲賢委員** 금릉은 또 뭡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우리 할아버지가 금릉군 봉산면에 사셨지요.

○**權哲賢委員**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이 정권에서 부총리를 하시기 전까지는 대구, 금릉 이쪽을 쓰시고 이번에 부총리가 되시고 나니까 충남 당진으로 쓴 게 아닌가 싶은데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금릉군 봉산면이 맞습니다. 그곳이 원적이고 봉산면이 경북과 충청도 경계선인데 아버님이 공주사범을 나오시고 충남 당진 온양에서 교편을 잡으시다가 제가 두 살때는 대구 덕산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權哲賢委員**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지대 총장 할 때까지 연합뉴스에 출생지가 대구로 나와 있기도 하고 경북 금릉으로 나와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93년도에 기자수첩에 나온 것을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 진보적인 인사가 되었다고 해서 염려하는 국민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면 그들의 불안을 덜어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말하자면 진보의 입장에서 보수를 달래가고 이를 대북정책에서도 적용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통일부장관 할 때 잘 안되었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제일 비판받은 것 중의 하나가 李仁模 씨 보낸 것인데 보내고 나서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70%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 과정에서 그런 객관적인 사실은 희미해지고 저에 대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쪽이 확대 재생산된 것 같습니다.

○**權哲賢委員** 하여튼 보수적인 사람을 껴안고 韓 부총리 나름대로의 견해를 설득해가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어렵지요.

○**權哲賢委員**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개혁을 하다 보면 접시도 깨지기 마련이다. 현 정부에는 개혁의 몸통, 즉 주체가 없고 반개혁세력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개혁을 해야 되고 과감하게 끌어가셔야 되는데 개혁의 주체가 없다고 했는데 교육부 내에는 개혁의 주체가 있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제가 학습중이기 때문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업무파악 중입니다.

○**權哲賢委員** 그런데 현 정부 내에서 반개혁 세력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고 했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얘기입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제가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저 흐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權哲賢委員** 그러니까 개혁적 주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 우리 정부 내에 래디칼리스트(radicalist)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처럼 들리기 때문에 교육부장관께서 그런 발상을 갖고 계시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점진적 발전주의자들, 인크리멘털리스트(incrementalist)들은 개혁적인 사람에 속합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맞습니다.

○**權哲賢委員**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존해 있는 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총리께서 점진적 발전주의자로 보시고 힘을 합해서 끌어나가시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신중하게 듣겠습니다.

○**權哲賢委員** 그 다음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정권은 자민련과 민주당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공조체제 위에 서 계시는 교육부 총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민련과의 공조체제 속에 혹시 맞지 않는 정책적인 신념이 나오면 어렵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특히 그 부분은 통일교육 같은 것입니다. 통일대북관, 대김정일관 같은 것은 지금 민주당과 자민련이 공조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다른 신념과 이념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자민련에 의해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다른 견해가 나올 때 어떻게 수용하시겠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래야지 대화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대화가 필요한 이유가 서로 의견을 듣고 역지사지하면서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내면 해결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權哲賢委員** 96년 저희들이 15대 총선 후 처음 출범했을 때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의 공조체제에 대해서 현명하지 않은 일이며 미래는 회의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상당히 회의적인 데에 서 계십니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회의적인 부분도 있었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듣고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 미덕이니까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權哲賢委員** 그리고 우리가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학교가 붕괴되었다는 이야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권의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작은 하나입니다마는 실제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사들을 잡무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사들이 너무 많은 잡무에 시달려서 자기들이 교사로서 발전할 기회, 또 학생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잡무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교사에게서 그 잡무를 떨쳐내는 것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듣고 계시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예.

○**權哲賢委員**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제가 잡무에서 얼마나 시달리는지 업무파악하고 나서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權哲賢委員** 그런데 이것은 부총리가 취임하고 나서인데, 2월부터 두 달간을 경제특별교육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일선 교사들에게 경제특별교육 홍보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어머니회에서 홍보하도록 하는 공문이 내려갔고 또 교사들이 그 일에 매달리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그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權哲賢委員** 이것은 비교육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그런 일에 시달려서도 안 되겠지만 교사들은 이 정부에서 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지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런 것을 시달하는 것은 교사들의 인권침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총리가 최근에 '우리 교육인적자원부 역할 중에서 네 가지의 인간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키우겠다.' 하면서 그 하나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열린 사고의 사람을 키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예, 그렇습니다.

○**權哲賢委員** 그러면 우리 교사들도 제각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존경받을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계획서를 시달해 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전공과 다른 것을 가르치라고 할 때 굉장히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韓完相 부총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제가 그렇게 한 것이 경제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보다는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기자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權哲賢委員**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韓完相 부총리께서 그런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權哲賢委員** 아니,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마저 정권홍보나 또 정권홍보의 연장, 그런 것을 교사들한테 시켜서는 韓完相 부총리시대의 교육행정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교사들을 자유스럽게 해주면서 교권을 확립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첫 날이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법 제정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학교설립허가를 맡아서 학교를 지어가다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설립허가 취소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짓다가 뼈마디가 앙상한 건물 몇 층만 남아 있고 거기서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더 이상 조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일정한 기간 지날 때까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그 장소에 학교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수용해서 공립학교를 만들 수 있다든지 뭔가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이 법제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선이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어느 기간이 지나도 학교는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설립자에게 이 학교를 누구한테 넘기자 어떻게 하자고 했을 때 설립자가 반대하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학생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교사들은 봉급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학교를 강제적으로 바로 개선시킬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이 부분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법제화가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비교적 빨리 해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5시1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揆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任鍾晳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鍾晳委員** 새천년민주당의 任鍾晳 위원입니다.

먼저 韓完相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평소 제가 존경하던 분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오셔서 대단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흔히들 우리가 백년대계라고 얘기하는 교육의 정부부처 장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李敦熙 장관께서 아마 6개월 정도 하시지 않았나 기억하는데 업무파악하고 그만두시고, 업무파악하고 그만두시는 꼴이 반복되고 있는데 모쪼록 韓 부총리께서는 최소한 현 대통령의 임기 정도는 같이하셔서 교육개혁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취임하셨을 때 하신 말씀을 제가 자료로 뽑아보니까 교육개혁은 일이년 안에 조급하게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교사, 학부모, 학생 중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선생님들이 사기와 사명감을 잃게 되면 교육은 끝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앞서 薛 勳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교사들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고 또 그분들의 사기를 높이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평소 여기에 대해 정책화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신지, 있으시면 이따가 답변시간에 간단하게나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韓 부총리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차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중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앞서 李在五 위원님이 정부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그때 반대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저나 李在禎 위원님 외에 많은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도 중학교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난번 鄭寅鳳 의원께서 대표발의로 여기에 관련한 법안을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법안을 우리가 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것은 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 반드시 해야 된다 무엇보다 앞서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재정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많은 고민을 통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대단히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같은 재정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때는 안 되고 대통령께서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敎育人的資源部次官 金相權** 우선 任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당시에 재정 검토를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任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원확보계획을 보시면 기획예산처에서 2004년까지 수업료, 입학금 결손액과 교과서대금 해서 7,993억원을 증액교부금으로……

○**任鍾晳委員** 차관님,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요한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정말 밀도있는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실무적 검토를 통해서 하나 하나의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본 위원회에서 그러한 정책이 나올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는 먼저 관계부처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옳겠다 해서 이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敎育人的資源部次官 金相權** 잘 알겠습니다.

○**任鍾晳委員** 지난 국정감사 때 여러 비리사학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남서울대나 화곡고, 예일고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정상화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학교를 정상화하는데 애써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비리사학들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여전히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문고, 경문대, 서남대, 홍명고 이들 사학들에 대해서 우리 여야 위원들은 물론이고 교육인적자원부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사학들은 모두 고쳐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대표적인 사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문고의 경우는 이번에 완전히 패소를 해서 현재 원만하게 학사운영이 되고 있고 교장이 3월에 정년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 이사회에서 과거…… 그러니까 94년에 상춘식 이사장 시절에 비리로 문제가 돼서 구속됐던 그 시기의 교감이었던 분을 교장으로 임명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문고 문제가 다시 처음부터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상당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서울시교육청 국감을 할 때 1심에서 졌기 때문에 2심 재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누누이 당부를 했고, 이우자 이사장도 재판에서 지면 손을 떼겠다고 했는데 그때 교육청이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한두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2심재판을 당연히 뻔히 질 것을 예상하면서 그대로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일부 사학의 비리를 없애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장서지 못하고 오히려 미온적인 대응으로 이것을 자꾸 재생산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자기 검열이 다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됐던 학교들에 대해서 韓完相 부총리께서 점검을 하셔서 진짜 고생하고 교육을 위해서 애써온 전체 사학이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반드시 일부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문제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은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언론보도가 나왔고 점점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알아 보니까 한 해에 약 15만명 정도 그것도 한 달 이상 정기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수가 15만 정도라고 합니다. 전체학생의 한 2% 된다고 하는데 학교폭력이 거의 반마다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해자는 무슨 학교봉사나 특별교육 등을 통해서 출석이 다 인정되는데 얻어 맞아서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는 결석처리됩니다. 결국 피해자가 떠나야 되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전면 확대되면…… 아마 의무교육이 되면 정학이나 퇴학 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견입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통일교육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한 해, 한 해 변해 가는데 교과서는 5년마다 개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중요한 인식틀을 결정하는 국정교과서에 전혀 그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 채 5년 뒤에나 다시 개편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昌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昌達委員** 한나라당 朴昌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심한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 탁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韓完相 부총리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입시제도, 교육재정확대 및 교원수급문제, 7차 교육과정 중 기술·가정에 관한 사항, BK21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공교육의 정상화문제, 성과급제도 이전 객관적인 평가기준문제 이런 사항들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부총리가 계시는 자리를 계속 쳐다 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7개월만에 네 분의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任鍾晳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모든 위원들이 잦은 장관의 교체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실·국·과장들도 대폭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관도 장관이지만 실무를 하는 실무자들의 잦은 교체, 이것은 정말 백년대계를 기약하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으므로 실무자들을 너무 자주 교체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계속 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국민의 정부 임기가 약 2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부총리가 앞으로 한 열두 분정도 더 안 바뀌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경륜이 높으신 韓完相 부총리께서 이번 국민의 정부와 같이 마무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부총리께서는 대표적인 저서 '지식인과 허위의식', '다시 한국의 지식인에게' 등 많은 저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63동지회 포럼에서 참여없는 반개혁 세력과 자신없는 개혁세력이 연합할 때 어김없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정치적 그레셤의 법칙이 나타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정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던 부총리께서 현정부의 교육정책 책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비판적이기 때문에 개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昌達委員** 또한 부총리께서는 모 일간지와의 대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과 당국이 힘을 합쳐서 마샬플랜에 버금가는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렇습니다.

○**朴昌達委員** 마샬플랜은 아시다시피 1948년부터 51년까지 미국이 2차대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유럽제국 부흥을 위해 실시한 부흥계획으로서 당시 미국의 경제상황과 IMF 이후 구조조정과 흔들리는 경제기반 위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통째 헐값에 외국자본에 인수·합병되는 우리의 절박한 경제적 상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질의에 앞서서 이와 같이 언급하는 것은 현재 부총리의 대북관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향후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방향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총리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마샬플랜 운운한 것은 전쟁보다도 더 큰 경제적인 피해, 사회·정치적인 피해, 인간적인 피해가 없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안으로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리고 6·15 이후 세계사도 달라지고 민주역사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통일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통일이 먼 훗날에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착실히 가기 위해서는 화해·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한 쪽은 긴장완화, 한 쪽은 화해·협력, 평화로 가는 길이지요. 그 가치를 존중하면서 통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朴昌達委員** 또한 조선노동당 창건 55주년 기념식에서 남측 대표단장으로 북한을 다녀온 후에 부총리께서는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고 북한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지 않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맞습니다.

○**朴昌達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타 부처와 달리 교육부는 자라나는 후세들이 올바른 가치판

단을 할 수 있는 가치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은 칠천만 민족의 염원처럼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민족으로서 민족의 동질성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6·25전쟁과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테러 등에 의해서 남편과 아들, 오빠를 잃은 불행한 슬픈 사람들이 이 땅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바친 참전용사들의 희생 또한 간과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앞에서 부총리께서 참여없는 반개혁 세력에 비판적으로 말씀한 바 있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렇습니다.

○**朴昌達委員** 그럼 우리 남한 국민들을 아프게 한 북한 당국의 참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래서 그 쪽도 변해야 됩니다. 오랜 냉전적인 대남정책이 변해야 합니다. 그런 공변공영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되지만 그 쪽이 사실 더 많이 변해야 되지요.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朴昌達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월15일인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87년도에 재미유학생 이재환 씨가 납북된 이후에 6월15일날 사망했다는 사망통보가 왔잖아요. 그것 보셨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朴昌達委員**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특히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 이재환에 대한 사인규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밝히라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과연 대학가나 젊은 세대에서 보안법 개편문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교육하고 직접 관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평소에 제 책을 읽으셨다니까 거기에 나타난 제 의지가 무엇이라는 것은 朴昌達 위원이 잘 아시는 줄 압니다. 모든 법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조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昌達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捧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花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花中委員** 새천년민주당의 金花中 위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출범과 동시에 韓完相 부총리와 같으신 학식과 경륜을 갖추신 분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총리로 취임하신 것을 일단 환영하고 또 축하드리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 왔고 또 그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나라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韓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를 잘 해결하실 것으로 믿고 또 국민들이 이를 잘 따라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질의는 서면으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서 여섯 가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인적자원부로 되면서 조직이 여러 가지로 개편되고 또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내내 학교보건에 대한 질의를 위원들이 입을 모아 다 하셨습니다. 급식이 잘못 되었고 또 오염된 음식을 먹였고, 사고가 발생했고, 약물 오·남용이 되었고, 성폭행이 되었고 심지어는 환경정화구역의 러브호텔 문제 등 각종 문제들이 작년 1년동안 범람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학교보건을 특수교육하고 묶어서 특수교육학교보건과라고 하는 것으로 개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학교보건과장님에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을 배치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학교보건은 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보건은 잘 아시다시피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그 중에서 학생의 신체검사, 이번에 홍역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 더더욱 세계가 하나로 되기 때문에 이름 모를 전염병들이 각 나라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또 통상증상관리의 응급처치 또 교직원의 건강관리 해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교육입니다. 마약, 약물 오·남용, 음주, 흡연, 안전사고, 성, 생리교육, 폭행, 성폭행,

자살까지 이런 문제들이 학생들 주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학교 내의 환경관리입니다. 음료수, 분진, 소음, 조도, 화장실, 환경정화구역 관리 그리고 네 번째가 학교급식으로 위생급식과 영양급식 등 이렇게 아주 많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학교보건사업에 대해서 교육부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더구나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과장님이 금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펼쳐가실 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면 또 시·도교육청은 거기에 따라서 학교보건과도 없어지고 또 사업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작년도 국감에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실 것인지 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고 앞으로 학교보건에 대해서 혹시 조직개편 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체제를 구축하시면서 정부의 정책수립·기획·평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환영하는 바이고 또 우리 교육인적자원부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과 연수기능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연수에 관련된 모든 시설이 행자부 관리소관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 교육부 산하에 교육행정연수원, 그전에는 교육연수원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계의 모든 분이 거기 오셔서 교육을 논하고 앞으로 전망을 이야기하는 이런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로 관리가 이관되어서 지금은 그런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가 되셨으니까 이제 교육행정연수원을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또 뿐만 아니라 연수원에 관련된 모든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로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중학교 의무교육은 시기상조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전부 다 만류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있다면 대학교까지 다 해야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정부가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환영합니다. 그 대신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다른 부처에서 예산조달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차액보전액 3,380억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조달을 하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안정적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하신 일 같습니다. 작년도 국정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것이 어쩌면 잘 못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져서 5년 이내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정은 하나의 방향이고 7차 교육과정에서 많이 안정되고 또 8차 교육과정, 9차 교육과정까지 가면서 발전하는 것이 교육과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7차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끝날 정도로 잘 성공적으로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정적 정착이라고 하는 안을 놓고 보니까 작년 국감 때 보다는 많이 정비가 잘 되었고 하는 방향이 되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영어로 영어수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영어교사 확보는 7.5%만이 영어수업의 능력이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100% 다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에서 기술·가정, 제2외국어 교사들을 복수전공 교사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과수업을 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반발이 교육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차 교육과정에 관련해서 또 하나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교과서를 서로 자기네 회사 것을 써 달라든지 또 선택교과로 써 달라고 하는 이런 로비같은 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초·중등교원수급대책입니다.

2000년도 들어서서 많은 도시나 큰 광역시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원수급대책이 어느 정도 되고 있

는데 도서·벽지는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작년도보다는 많이 수급이 되었고 또 교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한 것으로 도서·벽지교원에 대한 병역특례방안은 어떠신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고 제가 교육부의 보고서를 보니까 도서·벽지를 위한 교원병역특례제도를 교육부도 제안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진전이 되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우리 여학생들의 체육을 위해서 소프트볼을 혹시 육성할 의사는 없는지, 소프트볼 같은 것은 올림픽종목으로 이미 외국에서는 여성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또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잘 개발만 하면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굉장히 좋고 또 남학생들은 축구다, 야구다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여학생들을 위해서 소프트볼을 육성해서 혹시 여학생의 체육을 발전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고 되도록이면 저의 의견이 잘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貞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한나라당의 金貞淑 위원입니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이 되고 더욱이 우리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이 되면서 정말 앞으로 이 나라의 교육 그리고 인력자원개발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런 교육인적자원부의 새로운 출발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개발업무와 교육행정업무가 균형있고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지금 공교육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원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입시제도는 지금 혼미에 혼선을 거듭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교육이 송두리째 뽑아져 버린 소위 희망을 잃고 이민, 지금 이민을 지원하고 있는 60%가 교육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삼사십대가 이민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공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금 웬 또 인적자원개발업무를 여기에다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승격시키는 것입니까? 그래서 더 좀 일을 벌이면서 방만해지면서 효율적인 업무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작년에 1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13개월째 되는데요,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또 당장 금년부터 무엇을 어떻게 실시한다는 실제적인 실무프로그램이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년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금년 상반기동안 무슨 계획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는데 언제 교육인적자원부의 일을 시작하시는지,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일도 그래요.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질문를 했습니다. 인적자원부 예산편성권은 있느냐, 인적자원개발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총괄조정능력은 있느냐 그리고 분위기는 되어 있느냐, 인원은 충분하냐 또 업무는 개발되어 있느냐, 다 물었는데 모두가 다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내용은 나와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그날 답변을 조정권이 없다, 예산편성권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현재로는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상당히 솔직하게 답변하셨는데 왜 그러면 인적자원부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부총리로 승격을 시켰습니까? 준비를 해 놓고 시켜야지요.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교육 총체적으로 망가뜨려 놓고 뭐라고 변명할 말은 없고 교원들은 지금 계속해서 사기가 떨어져 있고 하니까 무언가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말하자면 집 불 내놓고 문패 바꿔달아 버린 격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 못 찾아가게…… 그래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지금 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 나라 교육이, 경제는 망쳐졌다 해도 5년 내지 10년이면 회복가능합니다. 교육은 망쳐지면 수십년이 걸려도 회복이 어려워요. 이렇게 교육을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엉뚱하게 끌고 가놓고 이제 정말 교육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교육행정 본연의 업무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것도 실패로 끝났는

데 인적자원부로 이름을 붙여놓고 부총리로 승격을 시켜놓아 가지고 왜 혼돈스럽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되었으면 업무가 탁탁 진행되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1년 동안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인원 14명 늘어난 것이 고작이에요. 이름만 근사하게, 문패만 바꾸어 달아 놓고 실무적인 프로그램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보고에 나타나 있지도 않고,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인적자원개발이 무엇이라는 개념정리라도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육부에 지금 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세계적으로 인적자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단독으로 부처를 만들어서 하는 예가 거의 드물어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것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통상산업부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가령 미국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 통상산업 그다음에 교육 이런 식으로 주로 가지고 있고 영국같은 경우에는 노동부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교육고용부로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직업훈련만 이쪽으로 떼어오고 나머지는 다 보건복지나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도 한 이삼십 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짧은데 그동안에도 각 나라가 인적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수십번 하면서도 아직 정확한 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해보지도 않고, 연구도 없이 덜컥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것 발표부터 해놓고 1년이 되도록 아무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지도 않고, 여기에 무슨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타임스케줄 하나 내놓지 못하고, 보고만 너절하게 하면 무엇합니까?

전혀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인적자원, 이름만 바꾸어 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과연 韓完相 부총리가 별을 따는 재주가 있다고 그래도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밖에서 여론 조사들을 한다고 그래요. 한 달 있을 것이다, 두 달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갖추어 놓지도 않고 근사하게 큰집이라고 이름만 바꾸어 달아 가지고 내용이 없는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전문가들을 교육부에 영입해서 인적자원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가 계시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적자원개발 업무에 관계되는 일의 양과 비중, 교육 본연의 행정업무와의 비율을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하실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일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韓完相 부총리가 발령을 받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작년에 북한에 가서도 그랬고 북한에 다녀오셔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기타 TV강의같은 것이 있을 때도 상당히 편향된 시각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북한전략 불변론이랄지 속도조절론, 시기상조론, 북한에 퍼주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이런 것들은 냉전논리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하셨고 그다음에 대북정책의 속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전부 냉전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쏘아부쳤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고 북한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남한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인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도 교육을 하시다 보면 앞으로 가치중립적인 역할, 중립성을 고수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총리의 생각과 틀린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하면서 흑백논리로 가져가셔서 과연 교육이 잘 되겠는가, 여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상임위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하실 때라도 좋습니다. 약속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염려를 많이 하고, 과연 이분에게 통일교육을 맡겼을 때 그 통일교육의 이념은 어떤 방향으로 정립되고 내용은 뭐가 되고,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학부형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답변시간에 답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 우리 韓 부총리의 생각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앞서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용을 하겠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중립적인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가겠다 하는 복안과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임 제일성으로 하신 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반가운 것이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게 하려면 우선 사기진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방안을 연구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기진작방안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지금 교직발전 종합계획안을 교육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재정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것을 완성하려면 우선 한 3년 안에 1조6,000억 정도 듭니다. 과연 돈이 있는가, 지금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행자부 이런 데서 재정확보가 확실한가, 아까는 확실한 것처럼 보고를 했는데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보전해 주어야 될 차액 약 4,000억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이것 한다고 다른 교육 또 다 망가뜨리지 마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개발원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OECD 국가 수준으로 가려면 369조가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GNP 4.5% 예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관한 특단의 교육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보고서가 보고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우리나라 현 경제수준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57조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지대계이고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다른 데다 줘가지고 다 날리지 말고 교육에다 투자해서, 공적자금 57조만 이쪽으로 돌려서 한번 해볼 의향, 그런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면서 우리 韓完相 부총리가 앞으로 교육개혁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겨 주시라는 뜻에서 의견을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개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교원수급이 정말 시급합니다. 교원수급계획에 차질이 많이 나서 특히 초등교육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趙富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원정년 연장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아까 또 잠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교원정년 문제는 교사들이 1년 더 하고 싶고, 3년 더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교사들의 자긍심에 관한 사기진작방안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적어도 교원정년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보충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입시제도입니다.

대학입시제도가 2002년에 많이 변경되는데 본 위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대폭자율화에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지필고사를 포함한 자율화를 할 의사가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변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 수능등급제로 가지요? 내신등급 이것 정확하지 못합니다. 특기·봉사, 추천서 그다음에 논술, 심층면접 이것 서너 가지 가지고 다 하는데 여기에 변별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수한 학생들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다 자율권을 주려면 그냥 다 자율권을 주는 방안이 어떤가, 지필고사를 포함한 대학입시는 좀 대학에다 맡겨줘도 됩니다. 특히 국·공립은 나라에서 돈을 많이 대주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사립대학 만큼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유보하면서 보완해서 속도조절을 해가면서 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영어교사가 7.5%밖에 안 된다고 최근에 발표했어요. 서울교육청에서도 작년 가을에 10% 정도나 될까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과연 지금 영어선생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어요. 제 의견도 똑같습니다.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영어로 강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전부 인기위주로 발표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교원 및 시설확보와 재원확보, 지금 5,500명씩 4년 동안 2만2,000명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런 상태로 가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초에 교육대란이 난다고 저는 확실하게 단정합니다. 교육대란이 납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 3자가 일치해 가지고 교육대란이 틀림없이 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나는가 두고보세요.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입특별전형제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아이들, 재외국민 아

이들 이대로 갈 것인가, 이것 나중에 위헌소송에 걸릴 염려도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의 내용을 낱낱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보완을 하실지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급제 이것 이대로 실시하면 현재의 분위기로는 무능교사 퇴출론하고 같은 것인데 교육이 잘 되어 가지고 정상일 때 이런 과정을 쓰는 것이지요. 현재 교사들의 사기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면 불붙고 있는 데다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재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기타 BK21사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敬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敬天委員** 새천년민주당 金敬天 위원입니다.

먼저 韓完相 신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취임을 축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고 또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된 것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정말 아무리 말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현정부에서도 23조5,000억원이라는 큰 돈을 교육예산에 투자한 것을 우리는 중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렇게 중요한 부처에 경륜이 많으신 韓完相 부총리겸장관님을 임명한 것은 그만큼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짐도 무겁고 지금 앉아 계시지만 마음도 편치 않고 머리도 편치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미국 부시 정부에서 제1의 과제로 교육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름없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국 부시 정부에서도 4,760억불을 교육에 투자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 위원들께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를 하면서 참으로 교육이 잘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가 많습니다.

이제 부총리께서 정말 교육의 현안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좀 신선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진단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金貞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민인구가 대단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가느냐 그러면 결국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재미동포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정말 교육이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랬더니 조기영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조기유학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온 애들이 전부 청소년 문제에 걸려 있다, 정말 교육위원이니까 고국에 돌아가서 이 문제 좀 잡아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고국에 돌아오면 공교육이 내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교육이 그야말로 활개를 치면서 사교육비가 정말 엄청난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조기영어교육 때문에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또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해 주는 일을 이번에 韓完相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취임하신다니까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해라." 하는 부탁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를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전망은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도 냉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겸 문제점을 지적하겠는데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이라는 것이 상대평가를 하는 것인가, 요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돌아오는 추세에 왜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사들의 권위가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린다면, 정말 교사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이 그야말로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희망이 있는 교육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교사들이 이렇게 될 때 불신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결국 그 손해는 누구한테 오는 것입니까? 학생들한테 오고 학생들한테 오면 결국 제2세 국민들이 그만큼 흔들리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수당지급과 복지기금 지원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도 대단히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서나 여러 라인을 통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이들의 보육 문제냐, 공교육의 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대정부질문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교육화라는 큰 틀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정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총리께서는 통일부총리를 역임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지금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정상회담 속에 담겨야 할 일들이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통일교육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누구보다도 부총리께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장관님의 인사말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간부 11명을 소개해 주셨는데 여성은 한 명도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현재 공모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11명이나 남성 간부들이 계시니까 두 명쯤은, 대통령께서도 30%를 강조하고 계시니까 두 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30%에 훨씬 못 미치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복안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대계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대했던 우리 金大中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부장관님이 여러 번 바뀐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이번에 韓完相 장관께서는 그야말로 오래 좀 야무지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金大中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마지막 장관이 되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이 그야말로 야무지고 구체적으로 표시될 수 있기를 정말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할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지혜를 많이 발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玄勝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勝一委員** 韓完相 박사님의 취임을 충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오늘은 상견례이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하는 톤이 혹시 질의식으로 나오더라도 답변은 안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코멘트를 하실 일이 있으시면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고서 야 이거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4학년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겠다 그것도 영어를 영어로 수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침 그것이 오보였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오보가 틀림없습니까?

○**敎育人的資源部敎員政策審議官 禹亨植** 1만명을 연수를 시키겠다, 오늘 기사내용 중에서 1만명의 교원을 연수를 시키겠다는 부분이 오보인 것 같습니다.

○**玄勝一委員** 그것이 오보이기를 바라면서 1만명을 120시간 영어공부를 시켜서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120시간이면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하면 10일 공부입니다. 영어 10일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를 영어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보도에 의하면 토플 500점 이상, 토익 590점 이상이 몇 명이냐 하면 전부 합해서 5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4학년 합치면 130만명입니다. 토플 500점이라는 것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지요? 요즘은 고등학생도 시험치면 500점 먹습니다. 미국의 대학에 가려면 적어도 600점 먹어야 갑니다. 이런 뚱딴지같은 정책을 내놓았는데 우리 韓完相 부총리를 완전히 버려놓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韓 박사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영어 120시간 공부하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내놓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육부의 소위 교육정책이었습니다. 의무교육을 한 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법안을 심의할 적에 의무교육을 2004년도에 가면 중학교의무교육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도 정부 교육부당국

자는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이 따라 줄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 법안을 보류시킨 것 잘 아시지요?

의무교육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교육부의 그 말에 우리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교육재정이나 사회복지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수요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생산력이 그만큼 확보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하는 것이지 좋다고 해서 덮어놓고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무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보고 일반적인 투표에 붙이면 그것이 절대적인 인기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성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서 되는 일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인데 의무교육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하실 적에 교육부당국자들하고 교육관계자들하고 상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에게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서 나라를 끌고 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개혁이라는 이름 밑에서 여러 가지 이 정권이 들어선 후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교육황폐 아닙니까? 지금 여당에 계신 金敬天 위원도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부 이민을 간다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한 쪽만 보고 한 쪽은 안 보는 그러한 단견으로 소위 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를 평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 반에 영어구문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더하기, 빼기, 셈하기, 읽기를 못하는 학생을 한 반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수업이 될 리가 없지요. 이렇게 해서 교실붕괴현상이 나왔습니다.

또 교육은 학생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소위 교육수요자 중심이다 이 수요자를 교사가 때릴 수가 있느냐 학생의 요구에 맞추어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론으로 체벌도 못하게 하고 또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이와 같은 한쪽만을 본 그 결과는 무언가 하면 교권의 붕괴라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학교를 좀 민주적으로 경영하자, 교사가 행정에 참여하게 하자, 학운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학부모와 지역주민까지 집어넣으면 민주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살하는 교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장이 끌고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학교를 위해서 가장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 아닙니까? 학부모 가운데도 훌륭한 분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 가운데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생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장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운위로 하여금 학교의 행정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함으로써 교장들이 완전히 손을 놓게 되어버린 그러한 파행현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또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문제, 교사들을 자극을 시켜서 연구를 시키고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물론 성과급을 도입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요즘 교사들 가운데 너무 일탈행위가 많으니까 이것을 잡아보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사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것은 세우는 것이고 성과급 도입문제는 그 자체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에 관한 한 전부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가지고 장관보고 부총리보고 교육개혁 잘 하시오, 교육개혁에 우리가 기대가 큽니다 하는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 모든 것을 호도하려고 합니다. 공산당이 혁명할 때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미화했습니다. 절대로 이 개혁이라는 그 말의 신화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개혁이에요. 지금 교육개혁하는 것을 보면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또 심각한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즉흥적으로 학운위를 도입하고 이와 같은 식의 개혁을 하는 것이 절대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잘 굴러가는 것을 뒤집어놓는 개혁 이것은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에서는 개혁이라는 말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개선이 좋습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것이 성과를 나

타내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교육도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부총리께서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혹 가지셨다고 하더라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만은 가장 보수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자라납니까? 실력이 하루아침에 부쩍 늘어납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고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 안정을 주고 환경도 서서히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언어의 마력에 사로잡혀서 교육을 개혁 위주로 내가 장관하는 동안에 한 건 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립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사학비리 이렇게 나옵니다. 사학은 비리라고 하는 말이 언어의 신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리가 있지요. 또 비리를 옹호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손톱 밑이 곪는다고 해서 손목을 잘라서 되겠습니까? 지금 사학에 관련된 법은 명분은 비리라는 이름으로 사학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까지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 내용을 들여다 볼 것 같으면 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사학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체제와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을 갖고 추진이 되는가? 손가락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팔목을 자르는 듯한 식의 접근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사학이 필요 없는 것인가? 사학과 공학이 병존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전부 국·공립화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대학은 80%가 사립학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집에서 살다보면 부모한테 불평도 있고 형한테 불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대학교육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사학 덕분입니다. 사학이 없었으면 우리 대졸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육문제에 있어서 접근을 그렇게 한쪽에 편향된 시각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韓 부총리께서는 대 학자임과 동시에 부총리를 두 번이나 지낸 대 정치가입니다. 스탕달의 말에 학자는 정치가를 경멸하고 정치가는 학자를 경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韓 부총리께서 실패하시면 경멸을 더블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그것을 다 극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건승하시기를 바라고 또 교육문제에 관한 한 심도있는 또 조금 속력을 천천히 하시는, 개혁을 하는 쪽보다는 지금까지 잘못된 일들을 수습하는 쪽으로 이 귀중한 시간을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田溶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溶鶴委員** 田溶鶴 위원입니다.

韓完相 부총리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인적자원부로 교육부가 확대 개편된 이후에 처음 맞는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지난 한 해 교육부 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 새롭게 교육인적자원부로 출범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부총리와 교육부 공무원들께서 더욱 심기일전 하셔서 여러 가지 교육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한 취지에 걸맞는 교육부 업무와 인적자원개발업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저 역시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오늘 현안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 중에서 중장기 국가인적자원 개발비전과 추진전략에 관해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으로 참여를 시켜서 중장기 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을 하겠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 관련 법령을 2005년까지 규제와 간섭 위주에서 지원·조성 중심으로 대폭 정비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정책의 의지는 예산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인데 올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을 보면 전체 23조원 가운데 공교육 내실화에 4,600억,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에 1조3,000억, 직업교육의 내실화에 2,300억원, 소외계층교육비 보장에 1,230억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인적자

원 개발업무에 편성된 예산은 290억에 불과합니다.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합친다 할지라도 2,6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인데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과 부총리로 격상한 취지에 예산이 너무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업무 자체는 교육인적자원부로서의 장기적인 비전과 추진전략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韓完相 부총리께서는 그동안 그 어려웠던 시기에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서셨던 기개와 용기로 참으로 중요한 국가인적자원 업무에 큰 토대를 구축하시고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불퇴전의 용기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확대개편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교육과 산업정책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총체적인 국가인적자원 관리업무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된 업무보고를 보면 사실은 교육과 산업정책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너무 취약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부총리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고실업 상황에서 오히려 청년들이 유망하게 진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업계에 인력난이 심각하다 하는 것이 전적으로 교육과 산업정책이 연결되지 않은 탓이고 바로 그런 효율적인 연결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탄생을 했다면 바로 그런 점에 업무의 무게중심을 서서히 옮겨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교육인적자원부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지난 9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총괄 조정기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12개 관계부처장관협의체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구성해서 그 의장으로 교육부총리가 정책조정을 주도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또 국정의 4대 분야 주무장관에서 인적자원 분야의 팀장을 맡기는 등 다각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을 추가하여 마련했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지난 90년에 신설되었던 통일부총리 제도하에서 韓完相 부총리께서 경험하셨겠습니다마는 사실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총괄조정권이 정부조직법에는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업무가 부총리께서 주재하는 통일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점에는 좀 판단이 다릅니다.

관계부처의 실질적인 조정수단이 없기 때문에 부총리 격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상기할 때 기능조정권한의 실질적인 강화가 법률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과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의 수행이 가능할 것인지, 이것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관련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조직과 기능의 통폐합 또는, 우선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관련예산에 대한 사전심의나 조정권, 기금운용의 협의권 또 심사분석권 아니면 직제조정권과 같이 실질적 조정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효율적인 총괄조정기능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이를 위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관련부처와 정부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880억원을 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행자부에서 봉급교부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부담하게 될 3,880억원을 행자부에 구상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교원의 수급 문제, 대학입시 특별전형 문제점 그다음에 물가인상률을 앞질러 오른 국·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 문제 그리고 2002년도 대학입시 문제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黃祐呂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祐呂委員** 한나라당의 黃祐呂 위원입니다.

韓完相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는 학덕이 높으시고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고생도 하시고 남다른 큰 성취를 하신 분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이번에 부총리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와 기대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韓 부총리가 어떤 분이신가 해서 최근에 쓰신 '다시 한국의 지식인에게' 라는 책을 죽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평소 민족을 생각하시는 따뜻한 마음에 제가 많은 동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러한 동감의 면에서 보다는 국민들이 부총리께서 어떻게 하실까 해서 궁금해 하시

는 국민의 입장에서 몇 말씀 나누어볼까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대변하는 것이니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여겨 주시고 또 국민 앞에서 담담하게 말씀해 주시면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韓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우리 국민의 머리에 남아 있는 화두는 "동맹국이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도 남아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金泳三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 앞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金日成 주석에게 말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문구를 듣는 사람은 金日成 주석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은 지금 어떠냐, 다 떠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민족이 동맹국보다 낫다, 그 동맹국이 소련과 중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黃祐呂委員**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제가 이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일각에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제없이 따서 새겨보면 혹시 민족적인 가치를 동맹국간의 어떠한 이념보다 앞세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토론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남한에서는 헌법정신의 확고한 불변의 진리로 파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것과 민족간의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자유민주주의가 열린체제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치같은 닫힌 민족주의와는 마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 민족주의하고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黃祐呂委員** 쉰들러리스트 이야기를 쓰셔서 제가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인류 보편의 박애라고 그럴까 인간 본연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우리 가슴에 와 닿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한의 근본적인 결합의 하나의 계기는 역시 그러한 인권이라고 그럴까 인간 본연의 가치라고 그럴까 또 우리 자유민주 국가의 기본적인 가치가 오히려 남북을 연결해 주는 끈이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고개를 끄덕임)

○**黃祐呂委員** 저희는 그래서 韓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양면성 중에 너무 사랑면 또 박애면, 민족애만이 강조되다 보니까 바로 그것의 반면인 정의라고 그럴까 인권이라고 그럴까, 이러한 그야말로 양면의 하나인 다른 면의 가치가 보다 분명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는 인권도 보편적인 가치이고 사랑도 보편적인 가치로, 저는 그것을 모순으로 보지 않고 같은 보편적인 가치로……

○**黃祐呂委員** 하나로 보시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예, 그럼요.

○**黃祐呂委員** 국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마치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과 같은 정의와 사랑, 평화 또 질서유지라고 그럴까 이러한 강한 면과 부드러운 면을 취해야 될 때 국가로서는 어떤 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가는 강하게 이러한 정의·인권같은 것을 굳건히 지키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많은 시달림을 그런 면에서 주장도 해주고 또 그러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 또 납북자 문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위험상황이 있을 때 강경한 면을 오히려 국가가 맡아 주고, 부드러운 면은 담당할 여러 가지 사회요소가 있지 않은가, 교회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또 많은 민간단체가 있고, 기업도 있고 또 국가가 그 일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좀 균형있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은 부총리께서도 이해하시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고개를 끄덕임)

○**黃祐呂委員** 우리나라는 통일교육 또 반공교육이 죽 맥을 이어왔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차원, 더 큰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종래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바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종래의 통일

교육이라고 그럴까 반공교육이라고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그 기조를 그냥 유지하시겠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6·15 이후에 국내외의 큰 흐름이 옛날식 냉전교육으로서는 이것이 부적절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黃祐呂委員** 그 대체형태로 지금 혹시 민족주의적인 민족애를 강조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모습을 지금 마음 속에 그리고 계십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존경하는 黃祐呂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도 여러 가지 얼굴이 있어서 저는 닫힌 민족주의는 아주 처음부터 거부……

○**黃祐呂委員** 폐쇄적인 민족주의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럼요. 만약 열린 민족주의를 말씀하신다면 그렇습니다.

○**黃祐呂委員** 종래의 6·25 냉전체제에 시달려 왔던 우리 국민으로서는 무엇보다 안보가 우리 국가나 우리 국민의 생존의 가장 기본요소였는데 이러한 안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안보보다 좀더 무엇인가 시혜적인, 박애적인 그러한 정신적인 여유를 가져보자 하는 말씀으로 저희는 선회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종래의 자유민주적 기본가치에 대한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黃祐呂委員** 그리고 북한 당국이 지금 아주 완고하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우리가 볼 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가치관을 신봉하고 또 그것을 강행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국민적인 경계심과 지적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한 정신교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혹시 옛날 제 책 가운데 '지식인과 허위의식'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북한에 대한 인권상황이라든지 자유민주의 가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는 마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현실이 자유민주주의 현실과 이탈되어 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을 누가 동의 안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화해·협력하려고 하는 새로운 역사적인 단계에 와서 여러 가지로 보다 큰 가치, 전쟁을 방지하자 하는 가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간의 모든 불신과 긴장을 완화하자는 입장, 전쟁방지의 입장, 평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날의 가치를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黃祐呂委員** 제가 미국 교포학생이 미국 외교관 시험을 보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한국교포니까 "네가 코리안어메리칸인데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상반되면 어느 것을 따르겠느냐?"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시겠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한국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이 보편적인 가치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면 둘 다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黃祐呂委員** 만약에 상충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상충되는 것은 가상적인 예인데 글쎄요……

○**黃祐呂委員** 흔히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미국에 가서 미국시민이 되었으면 시민으로서 미국의 국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요. 더불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상충이 그렇게 심각할 때는 고민이 되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제가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할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黃祐呂委員** 이 학생은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참 좋은 대답입니다. 명답입니다.

○**黃祐呂委員** 우리 교육을 총괄하시는 부총리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특히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소아적인 또는 인정적인, 또는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그런 데 집착하기 쉬운데 보다 큰 인류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와 정의·진리를 추구하는 교육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그런 전제하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상호주의원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글을 많이 쓰셨는데 부총리께서

이 책에 쓰셨듯이 만약에 북한이 선군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냉엄한 현실에서 그야말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지, 히틀러가 큰소리 칠 때 영국의 챔벌린이 그것은 하나의 제스처라고 보다가 전쟁을 유도한 예가 있었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만의 하나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부총리의 가르치심이 우리 국민에게 너무 안일한 입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간단히 말씀드리면 히틀러 때하고는 다릅니다. 독일은 산업적인 기반이 튼튼했고, 1차대전 직후에 경제적인 공황이 있었지만 산업기반이 충실한데 비해서 지금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격차가 30 대 1입니다. 그러니까 선군정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 우리하고는 경제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당시 독일과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비교하는 것 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군정치는 오히려 실제로 그들의 현실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해서 남북간의 비대칭, 우리가 훨씬 강하다 하는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黃祐呂委員** 그런데 오히려 저희보다 더 강한 일본이나 미국은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가 자만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부총리께 말씀을 강요하거나 또는 논쟁할 의향은 전혀 없고 그런 말씀을 전해 봅니다.

또 DJP야말로 이 시점에서 현정부가 선택해야 할 가장 적절한 제3의 길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내 판단에는 전혀 다르다, 이같은 제3의 길은 金大中 정부의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는 원초적 장애물임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체감하게 될 것이다라고 소신을 피력하신 것을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당 공조체제하에서 의견이 다를 때 부총리께서는 특히 교육사상이나 여러 가지 반공교육을 하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시겠습니까? 타협점을 찾으시겠습니까, 소신대로 하시겠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黃祐呂委員**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부시정부나 강력한 야당인 한나라당이 상호주의와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경청해 주시고 한나라의 교육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진보적이어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보수적이어도 안 되지만 적어도 중립적 입장에서 종래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왜 이렇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걱정을 여러 국민들이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그 점만 말씀드립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딱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법관의 경험이 있는데 법관들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정책을 못 씁니다. 왜 못 쓰느냐 하면 재판받는 사람이 열등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를 70%, 30%, 또 70%도 3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상대평가를 해놓으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바꿔 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만 잘못하면 교사의 혼란뿐만 아니라 전 학교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에 대한 우려를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다 동등한 선생님한테 교육받을 학습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은 다 다르겠지만 국가가 차등이 있다는 것을 공인하는 정책은 모순된 것 아니냐, 그리고 교육의 파행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등의무교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과연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며 재원을 염출할 때 기존에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해왔던 계획이 많이 변경되는데 그 변경이 용인할 만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마지막으로 李在禎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禎委員** 새천년민주당의 李在禎 위원입니다.

우선 韓完相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새로 취임하셔서 이 나라의 교육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수많은 일을 감당해 나가실 것에 대해서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동안 韓完相 부총리께서 살아오신 경륜과 지혜와 철학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정

책과 좋은 방안이 수립되어서 이 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저는 업무보고 가운데 몇 가지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제7쪽에 나와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라고 하는 회의체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이 회의가 여기 있는 이 이름과는 달리 그 관계부처 장관들의 회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이름에 걸맞을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회의에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조정에 끝나지 않고 정말 인적자원개발의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13쪽에 보면 교원수급상황 보고가 있는데 금년도 교원의 수급부족이 3,020명으로 되어 있고 이 현상의 원인으로서 정년퇴직이 86명, 명예퇴직이 466명, 일반퇴직이 406명, 미충원이 2,307명, 기간제교사 해소가 7,18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교사수급에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교사의 해소로써 7,186명과 미충원된 2,307명 때문에 결국 중대한 원인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수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기간제교사라고 하는 것을 좀더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소위 기간제교사를 통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이 충원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충원 수급을 그저 막연히 신임교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21세기 다원화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교육의 다양성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각계각층에서 여러 분야의 능력있는 분들을 이 기간제교사라는 제도에 좀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와 함께 교사의 연령별 분포를 지역별로 산출해서 보고해 주시고 현재와 같은 교사수급의 부족상황이 언제쯤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0쪽,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3·4학년에게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도록 밝혀놓고 있는데 정작 일선학교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 이것 상당히 매력적인 말입니다만 벌써 이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서 영어과외를 시키는 열풍을 낳는 정말 참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이 계획이 가능한 일인가? 더구나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영어교사 6만7,464명 가운데 불과 7.5%인 5,074명만이 요구수준의 영어수업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이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하려는 것인지 역시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별도로 저는 요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덕성여대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도 국정감사 이후 최근까지의 상황에서 보면 점점 더 악화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덕성여대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한 것이 낮은 전임교수의 충원율 개선, 교수협의회 교수들에 대한 고소취하, 3년 동안 교수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던 사유에 대한 추궁, 부총리께서도 총장을 지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3년 동안 교수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학교가 있다면 이 학교의 운영자 측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총장이 입시수당 과다지급을 사유로 교무처장을 고소하면서 자신은 판공비를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는, 더 나아가 불요불급한 보직, 가령 부총장이라든가 종합개혁발전처장이라든가 하는 보직을 신설해서 연간 1억원 이상 학생등록금을 낭비한 일들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모교출신 교수연수자는 일반교원과 신분이 다르므로 이들을 교육부에 전임교원으로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일 뿐만 아니라 일반교원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정 임용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고 현재 학내분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정감사에서 함세웅 이사와 방정배 이사에 대해서는 복귀하도록 하는 약속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

혀 지켜지지 않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사회가 소집되었는데 12월11일의 경우 소집 당사자인 김기주 이사장이 아무 이유없이 이사회에 불참해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고 12월27일에 소집된 이사회에서는 방정배·함세웅 이사의 복귀를 논의하지도 않은 채 금창태, 송도균이라는 새로운 두 이사를 임용함으로써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까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박원국 전 이사장이 사실상 이사회에…… 지난 1월19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승소하면서 복귀하였고 이에 따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서 덕성여대 사태가 상당히 혼미한 상황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관청인 인적자원부는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제가 네 가지로 서면질의를 요청하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또 오늘 부총리께서 장시간동안 애를 많이 쓰셔서 나머지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호치민 한국학교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마는 호치민 한국학교도 우리가 재외 한국학교의 하나로 간주한다면 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재임용, 재계약 불가 통지를 임의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토 한국학교 역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이 학교에 약 삼사십 년간 총 34억엔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역시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수능과 대학입시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준비한 몇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교원성과급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黃祐呂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사라고 하는 신분은 정말 다릅니다. 학생들이 보기에 가장 존경스럽고 따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다 꿈이고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사모하는데, 가령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처럼 A, B, C로 나누어져 우리 선생님은 C급 선생님이다라고 할 때 아이들이 갖는 어떤 열등의식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은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간의 경쟁도 있어야 되고 경쟁시대를 이길 수 있는 교사의 자질도 함양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연구를 해주시고 제 질의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李在五 위원, 曺正茂 위원, 朴昌達 위원, 金貞淑 위원, 田溶鶴 위원, 李在禎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오늘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金貞淑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다는 양해가 왔습니다. 金貞淑 위원께 성실한 답변을 함은 물론이고 다른 서면답변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는 金貞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상대로 열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또 많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金貞淑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화끈하게 해주셔서 제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준비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金貞淑 위원님께서는 지난 1년동안 교육인적자원부 출범에 대비해서 해온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인적자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할 의향은 없는지, 교육행정과 교육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부총리가 어떤 비중을 두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으신 것을 제가 충분히 만족스럽게 대답할 수 있을지 오늘로서는 자신있게 시원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1월29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부서도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교육정책기획관실의 일 개 課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제는 대대적으로 시작하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오늘 견책해 주신 정신으로 잘못하면 계속 나무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적프로그램 개발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자화자찬같습니다마는 용서해 주신다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여덟 차례에 걸쳐 23개 안건을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운영을 했고 교육인적자원위원회 출범을 대통령자문기구로 했고 또 인적자원개발 워크숍, 세미나 등을 한 바가 있고, 5개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부처 조정대상 업무분석 또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인적자원 정책 관련 축적된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에서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장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인적자원정책 관련 학위 등을 취득하거나 업무 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을 이런 자리에 배치하고 내부 워크숍 등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강화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KDI, KEID, 직능원 등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의도는 무슨 회의를 몇 번 했다 안 했다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부계획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인적자원부가 딱 발표가 되면 금년부터 우리 인적자원부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여기 답변에 2002년 상반기 중에 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대통령이 작년 1월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13개월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적자원부로 이름이 딱 바뀌어지고 나서 이제사 이것 해볼까, 저것 해볼까 해가지고는 늦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 관계자들의 그 업무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업무가 점점 다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시는데, 지금 총괄 조정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없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능력이 없는 이 껍데기 뿐인 인적자원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효과를 어떻게 가져올 것입니까? 껍데기뿐인데. 지금 예산편성권도 없고 조정할 능력도 없고 또 1년동안 교육부 직원이 구체적으로 연구개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사업이 없는데 이름만 바꾼다고 인적자원 개발이 되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조정권도 없고 예산편성권도 없으면서…… 내가 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업무가 각 부에 흩어져 있어요. 이제 이 관련예산을 내년부터 짜야 될 것 아닙니까? 벌써 짜여져야 됩니다. 아마 추경부터 짜여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각 부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이다, 직업교육이다, 훈련이다 이래 가지고 받아 간 것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시행하려면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받아놓은 것부터 업무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되어 있는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름만 인적자원부라고 붙여서 내가 부총리라고 다닌다고 그래서 인적자원 개발이 되겠느냐 제가 이것이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알겠습니다.

○**敎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제가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교육위원회에서 그러한 상세한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드린 정책연구 및 과제연구를 다섯 개 과제를 끝내 가지고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지난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해놓고 엉뚱한 답변하지 마세요.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은 상반기 중에 하겠다” 여기에도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늦었다는 것인데 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지금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인적자원부부총리한테 물어보았어요. 왜 불쑥 튀어나와서 답변을 해요? 바로 교육부의 직원들이 지금 이런 태도로 무사안일하게 일을 하면서 장관을 100일짜리 장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지금 李 실장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알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지금 내가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답 알아요. 답을 아는데 한완상 부총리에게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했어요. 있으면 여기에다 열두 번 내놓았겠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저는 金貞淑 위원님의 염려와 질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로 밑에 공무원들에게 사실 제가 취임하면서 "뭐가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꼭같은 질의를 제 대신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金 위원님, 제가 계속할까요?

○**金貞淑委員** 예, 답변하십시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수박 겉핥기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실까봐 제가 좀 주저가 됩니다마는……

○**金貞淑委員** 지금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권도 없고 전문성있는 스탭들도 없고, 또 직원은 14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14명이 와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듭니까? 몇 년 걸려도 될똥말똥한 일을 지금 이제서야 시작해 볼까 하는 분위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뭐를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역점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金貞淑 위원님께서는 교사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교직발전종합방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던데 이것은 서면으로 내면 안 되겠습니까?

○**金貞淑委員** 예, 그 방안은 지금 완성되어서 하고 계시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예.

○**金貞淑委員**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한완상 부총리께서 취임하셔서 기자회견을 할 때 "교사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좀 연구해 보아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연구는 많이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뭐가 사기진작 방안으로서 떠오를만한 대안이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전국의 교사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에서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지금 말씀드릴까요?

○**金貞淑委員** 예.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주요내용을 제가……

○**金貞淑委員** 아니,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교육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생각을 얘기하시라고요.

○**委員長 李揆澤** 사기진작 방안은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金貞淑委員** 아니, 한완상 부총리님께서 사기진작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는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세만은 확실합니다. 제 아버님도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고 저도 평생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기진작 없이 개혁 못합니다. 의지만 말씀드리고 방안은 앞으로 위원님께……

○**金貞淑委員** 사기진작 정책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아주 절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貞淑 위원님께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공적자금 활용방안과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제가 간단히 대답한다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년 연장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金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문제 아닙니까? 당 입장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부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년단축 62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역기능 또 순기능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가이시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이것을 만약 뒤집는 경우에 교육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떠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직사회 혼란도 있을 것이고 또 사범대학 졸업생들의 미발령 적체문제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한번 커미트를 한 것인데 제가 와서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의 것이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제거하고 착실히 내실화해서 그 많은 교육개혁을 내실있게 실천하자 이것이 제 기본자세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아까 교육재정 얘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제가 5년간 약 57조가 드는 문제 이것을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사는 없으신가 물었는데 답변을 안 주셨고, 사실은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GNP 6%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교육재정을 확보해서라도 해야지…… 지금 중학교 의무교육 안 하는 나라가 OECD국가 중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부가 돈을 안 써야 될 데다 쓰고, 써야 될 데다 못 쓰는 것이 구체적인 예로 BK21같은 것은 당장 안해도 됩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지금 엉뚱한 것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들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데, 결국은 또 중학교 의무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결국은 돈 때문에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위주로 정책을 남발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적자금을 얼마라도 투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한번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안을 만들어 보실 의사가 있느냐, 그만큼 교육재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6% 약속해 놓고 지금 4.4%입니다. YS정권에서 5.8%까지 갔어요. 해야 되는 것을 당연히 해놓고…… GNP 6% 공약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교육재정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공적자금이라도 투입해서 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일조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다음에 교원정년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사들은 교사생활 1년 더 하고, 몇 년 더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망가졌다 이것입니다. 교사로서의 사기와 자긍심이 꺾어질 대로 꺾어졌고 실추되었다는 것 때문에 어떤 것을 갔다 주어도, 돈 몇 푼씩 더 준다고 해서 사기 안 올라 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수급이 엉망이니까 한나라당은 65세로 주장하지만 1세 정도…… 정말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세 정도로 해서 63세 정도라도 해놓으면 교사들에게는 아, 교원정년 정책은 정부가 실수했다는 것이 인정되는구나 하는 자존심이 회복될 것이고, 사기문제이고 교원수급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제가 의견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 혼란없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 韓完相**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 포함 이것을 물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지나친 교과성적 중심 이것은 학생선발에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대입제도의 골격인데, 이런 의미에서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마는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실시는 제한한다고 이미 98년10월에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지필고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貞淑委員** 대학입시문제에 있어서 자율화를 시키려면 완전자율화를 해버려야 됩니다. 지금 내년부터 수능도 등급제로 합니다. 우리집 아이가 지금 고3이에요. 제가 굉장히 연구를 합니다. 우리 아들 고3짜리가 있는데 수능이 내년부터 등급제가 되어서 9등급으로 해가지고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냥 1등급, 2등급 해서 되어버리고 내신 등급, 다 추천서 가지고 갑니다. 또 특기· 봉사점수 전부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가요. 대부분 누구나 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요.

그다음에 논술하고 심층면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학생 하나를 놓고 10분이고 20분 해서 심층면접을 합니까? 그 교수들이 시험관들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객관성을 갖고 타당성을 갖는다고 인정을 합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변별력을 찾아서 아이들을 뽑겠습니까? 그나마 시험이라도 볼 데는 보고 서류로만 뽑을 데는 그렇게 뽑고 자율화시켜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가는 책임을 면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켜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영어, 수학, 국어를 너무해서 탈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못 시키게 하고 있는데 몇 년 사이에 학력이 얼마나 저하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고3짜리 모의고사를 보면 작년 재작년 수준의

60%도 문제를 못 풀고 있어요. 하향평준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고 아이들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불안하니까 과외를 하고 해서 하는 학교는 밤을 세워서 하는데 그러면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공부 안 시키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안 하면 입시제도가 무너집니다. 지금 현재 노래만 잘 해도 대학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金 위원님 말씀 아주……

○**金貞淑委員** 제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요, 제가 장관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장관이 바뀌셨으니까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장관님, 답변을 좀 효율적으로 하세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알겠습니다. 제가 요령부득이어서 죄송합니다.

○**金貞淑委員** 지금 밤을 세워서 교육에 대해 토론해도 모자라요. 교육이 엉망이 되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정부에 들어와서 더 엉망이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7차 교육과정 시행유보문제와 교원 및 교실확보와 교육과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교원과 교실 시설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과 여건개선을 위해서 매년 6,0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고 2004년까지 매년 5,500명 교원을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金貞淑 위원님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적자원관리분야 등 교육전문가의 영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부에 보면 이 방면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전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관보도 있고 적절한 후속조치가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업무를 어디에 집중을 하실 것인지 저를 설득을 한번 시켜보세요. 인적자원개발업무를 앞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겠다는 그런 어떤 포부같은 것이 여기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이때까지 지난 반세기동안 공급만 했는데 이제 21세기를 맞아서 공급만이 아니라 수요 쪽도 우리가 보면서 하자는 것이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틀 안에서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金貞淑委員** 인력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교육을 시켜서 공부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인력수요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충분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가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金貞淑委員** 제가 질의를 더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인력수요에 대한 예측과 교육과 훈련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자신이 있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막연히 선진국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서 무조건 시작을 하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기상조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지만 시기상조예요. 보세요. 보나마나 내년 이맘 때 쯤이면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중학교 무상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재원확보에 대해 물으셨는데 아까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숫자에 관한 것이니까 서면으로 내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준비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의 영어수업에 대비해서 작년 4월부터 교실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것 가운데 상당수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세계의 어디에 가더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절대수가 모자라는 것도 제가 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金貞淑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7차 교육과정은 이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실적으로 대폭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서 교원이 도저히 안 되지 않아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대로 그냥 가시다가 나중에 교육대란이 나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교원정년 때도 이래서 내가 물었어요. 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교육에 난리가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큰소리 빵빵 쳤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교육이 망가져서 아이들이 지금 피해를 입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손해를 보았는지 또 얼만큼 질 나쁜 교육을 받았는지 전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또 병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차 교육과정은 국민소득 2만불대에 실시하려고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조기에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완을 해주시되 시간을 좀 늦추어서 유예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을 늦추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보완에 대한 것은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유보는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면 잘 하시려면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입하시라고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돈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그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해드릴게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감사합니다.

사실 이 대란 걱정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소신은 말하겠습니다마는 크게 떠들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薛 勳委員** 金 위원, 지금 金貞淑 위원이 혼자서 30분을 하고 있다고요, 金 위원 혼자서 교육위원회 해요?

○**金貞淑委員** 다른 분들이 안 하시고 하는데 교육이 걱정이 되니까 나라도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도대체 왜 그래요? 남이 말할 때는 가만히 좀 계세요. 이게 어느 나라 예법이요, 왜 그래요?

○**薛 勳委員** 金貞淑 위원 혼자하는 거요? 위원회하는데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오늘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렇지 않아요?

○**金貞淑委員** 도대체 왜 그래요? 깡패도 이렇게 안 해!

○**委員長 李揆澤** 薛 위원, 참아요! 부총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薛 勳委員** 이 위원회가 金貞淑 위원회야?

○**金貞淑委員** 교육위원회야!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 뿐이야. 어디다 반말이야?

○**委員長 李揆澤** 장관, 빨리 답변하세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金貞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례되는 말씀일지 몰라도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하는 질책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는 지난날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 하고 지금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으로 간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편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국내외에 많은 동조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다만 가치중립적인 것은 제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한 것입니다.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답변 다 끝났지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예.

○**金貞淑委員** 위원장님, 마지막에 저도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시간을 조금 과하게 쓴 것은 반성을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발언만 하려고 그러면 무자비하게 가로막고 이것은 폭력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金貞淑 위원!

○**金貞淑委員**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로 회의를 진행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委員長 李揆澤** 왜 또 위원장한테 화살이 돌아와요!

○**金貞淑委員** 앞으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委員長 李揆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 보고된 해직교사와임용제외교사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특별법제정에관한청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 아마 처음 상견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에 대한 노력을 하시고 오늘은 첫 상견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솜방망이처럼 부드럽게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서면답변할 정도까지 많은 양해와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그리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월2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出席委員(16人)

權哲賢	金敬天	金德圭	金貞淑
金花中	朴昌達	薛　勳	李揆澤
李在五	李在禎	任鍾晳	田溶鶴
趙富英	曺正茂	玄勝一	黃祐呂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尙	元鍾
전문위원	鄭	順泳

○政府側參席者

교육부인적자원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韓	完相
차관	金	相權
기획관리실장	李	基雨
학교정책실장	金	朝寧
평생직업교육국장	金	京會
대학지원국장	具	寬書
교육자치지원국장	金	坪洙
공보관	李	承茂
감사관	李	永燦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金	正基
교원정책심의관	禹	亨植
총무과장	白	鍾冕

【報告事項】

○報　告

1월16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000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전재욱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通　知

2월3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을 추천의뢰하는 통지가 있었음

○請願回附

해직교사와임용제외교사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특별법제정에관한청원

(2001년2월12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 495 동부아파트 101－707 이병주외 4인으로부터 李揆澤 의원외 1인의 소개로 제출)

2월12일자 회부됨